

인권하루소식

2001년 7월

(제1887호-제190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3일(화)

제 18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재소자폭행 목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소년교도소가 재소자 사이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규율을 잡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정상(21세, 서울 장안동거주) 씨는 소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진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지난 2월 15일 소년교도소에 입소해 공장출역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출소 전날까지 거의 매일 재소자 조 모(23세)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조정상 씨는 외상이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의무과에 실려간 적도 있지만 이를 말리거나 제지한 교도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정상 씨와 가해자 조 모 씨 등 김천소년교도소 3상3방에서 생활하는 10여명의 재소자는 모두 3공장(총인원 50-60여명)에 출역, 악세사리를 생산했다. 조정상 씨는 "재소자들인 '공장책임자', '각 방 책임자'들이 작업량이 적은 (주로 신입) 재소자들을 모아 기합을 주고 작업도중 화장실로 불러 10여분간 얼굴, 배, 허벅지를 마구 때리곤 했다"고 호소했다.

운동이 있는 날은 운동장에서도 맞은 사실을 털어놓은 조정상 씨는 "이를 목격한 교도관들마저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행이 눈앞에서 이뤄져도 "살살 다뤄!"라는 말이 고작이라는 것.

조정상 씨가 폭행을 당해 지난 6월 10일경 의무과에 실려갔어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출소 바로 전날인 23일 자정 무렵 보안과에서 검신할 때 "방 책임자 조 모

씨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구타했다"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김천소년교도소 배회창 보안과장은 "출소 전 부정물품을 갖고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다 벗겨 검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혹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조정상 씨가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지금도 조정상 씨의 왼쪽 뺨은 심하게 부어 올라있고 몸 여기저기 나 있는 멍 자국과 왼쪽 손가락 골절은 일반인의 눈으로도 확인될 정도다.

출소 후 조 씨는 서울 장안동 소재 새서울외과의원에서 '좌측 제3중수지 근위부 골절 그리고 좌측안면부·하악 골부·좌측대퇴부·좌측상완부·좌측하지부·좌측수부의 다발상 좌상' 등을 이유로 4주진단을 받았다.

조 씨의 어머니 구영자 씨는 "내 자식이 비록 죄를 지어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이렇게 무법천지라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냐"며 한탄했다. 조 씨 가족은 지금 김천소년교도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보영)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통계약직노조, 투쟁기금 마련 채권발행

사측이 행한 부당해고에 맞서 2백여 일 넘게 파업중인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이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한통계약직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파업을 벌여온지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파업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투쟁기금을 각출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렸다. 생계 때문에 소속 지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투쟁기금 중 상당부분은 병원비와 법률비용에 들어갔다. 지난 1월 한통 본사 앞 노숙농성 중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이동구 조합원, 지난 3월 목동전화국 접거투쟁 때 생긴 부상자, 구속자 등. 한통계약직노조는 굶직굶직한 지출을 연이어 했다. 파업 때 벌금형을 받은 사람만도 49명에 달한다. 재정충당을 위해 뺏치·티셔츠·주문도시락 판매도 했다. 한때 '돈이 바닥나서' 1천6백원짜리 도시락도 제때에 구입하지 못하기도. 이 때문에 지난 6월 24일 총회에서 '투쟁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통계약직노조 감태봉 지도위원은 "장기 투쟁을 벌이면서 가정이나 노조 차원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7월부터 조직을 재정비하고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 사측과의 교섭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감 위원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쟁 채권' 발행가는 5만원이며, 한통계약직노조 파업 종료시점부터 12개월 안으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발행했다. 구입문의는 전국공공연맹 선전국(02-2236-3800). (심태섭)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⑤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인권교육과 국가의 무관심

"학교는 학생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율합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리 길이와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한 바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들이 그냥 전승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그것이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또 어떤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현희 교사(서울정보산업고)는 "아무런 검증 없이 강요되는 규율 아래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인성교육 담당직원은 "인권교육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인성교육이 시·도 교육청의 자체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

유엔은 이미 93년 비엔나선언 및 95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아래 10년계획)'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교육부에는 인권교육의 전담자조차 없는 실정.

국가인권위법, 인권교육 명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법(아래 법)에 인권교육이 적시됐다. 법 제26조는 국가인권위에 인권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인권교육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의권의 실효성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디어 인권교육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체와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우선 국가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권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및 '인권교육의 정규과목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대학 등 각종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강좌의 개설 및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구의 교류·협력'이라는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 인권단체들과의 모색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국가정책수립 절실

최근 경찰청은 경찰인권 비디오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매달 한번씩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 한다. 하지만 경찰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통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식. 이에 대해 경찰청 교육계 김선운 경위는 "교육실시 이후 어떤 점에 개선됐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다"고 밝히, 경찰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따라서 범죄자, 수행자, 노동자 등에 대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시각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인권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채용 및 승진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권교육은 검찰, 교도관 및 군인 등 모든 '인권가해집단'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시대의 인권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법적 틀, 예산, 정부부처의 지원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용)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10년 계획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건설에 목적을 둔 다양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전라수립 △국제·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능력의 배양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강화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계획에서 명시된 인권교육 대상에는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자, 국회의원, 민간단체, 언론 등 인권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집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0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행동계획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여기서 정부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와 인권 연구·훈련기관이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조정·이행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근본적 힘이 인권교육에 있다고 본 10년 계획은 "인권교육 자체가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각 국 정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함"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고근예)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7월 5일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에 부쳐

민주노총은 6월 2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1. 노동운동단합·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5일 하루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하루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단합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 실수 10만 명의 서울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3. 10만 서울집중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제 그 결전의 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전노협이래 최대의 단합을 뚫고 결행하게 될 민주노총의 총파업 뒤에 쏟아질 보수언론의 왜곡과 호도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불법 파업'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가문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 '경제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재촉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세금포탈 문제로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그 본질이 사라지라.

상기해 보자.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가 'IMF와의 재협상'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집권 3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강패들의 테러로, 재벌개혁은 4대재벌강화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법으로, 부패방지는 끊임없는 정치자금 공방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게다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1년에 100여명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어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명품 소비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소위 '황금귀족' '귀족백수'가 등장하여 부자 부모 덕에 29세 청년백수의 한달 용돈이 200만원, 23세 미혼여성의 한달 피부관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한다. LG전자는 1000만 원대 물건만 취급하는 부자만의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 앞에 민주정부로 잠시 착각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야당정권 장악'은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복지·통일·인권 대통령'은 어불성설에 민중 호도용 선전문구임이 분명해졌다.

거꾸로 도는 이 세상에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지지, 건강보험재정파탄 촉진하는 특별법지지, 교육개혁 빙자한 귀족학교 반대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우리는 짓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원해야 한다. 조선일보 불매운동에라도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 땅에 마지막 남아 있는 희망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주간인권호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1.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 (6.25) /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6.25) /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에 기총사격" (6.25) / 전민특위, 코리아전법재판 판결문 백악관전달 (6.26) / 범국민 민간인학살규명위, "한국전쟁 때 국군이 철곡에서 민간인 2~3백여 명 학살" 미 극비문서 공개 (6.27)
2. 단병호 위원장, 명동성당에서 7월7일 총파업 지휘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152명 "노동단합 중단" 성명 (6.25) / 민주노총 "노조활동 허위·왜곡 보도 중지",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 (6.25) / 단병호 위원장, 대통령명단 요청 (6.26) / 한국노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해야" (6.27)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 "집회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 (6.29) / 단병호 위원장 수배망 뚫고 명동성당 농성돌입 (6.29)
3. 경찰, 용산경찰서 사망의경 고참 폭행인정 6월 17일 용산서 의경 사망 사건, 서울경찰청에서도 수사시작 (6.27) / 사망의경 고참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사건발생 2일전 가혹행위 (7.1)
4. 억압받는 사상의 자유, 위협받는 생명권 서울민주노동자회 활동가 9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 (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 (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가인권위 구성·국보법 개정" 촉구 (6.30)
5. 소수자 억압은 이제 그만! 국회 환노위 국감자료, 국가·지방자치체 60%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6.25) /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통계, 노숙자5명 가운데 1명 풀 결핵 (6.25) / 모성관련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여성보호는 더욱 후퇴 (6.26) / 1급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 (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라고 확정판결 (6.27)
7. 기탁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 (6.29) / 교도소 의문사 박영두 씨 타살결론 (6.25) / 주한미군기지 재조정 잠정합의 (6.2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4일(수)
제 18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교정당국이 수감 도중 암 진단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어떤 치료도 하지않다가 생명이 위독해지자 형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경 청주교도소 여사에 입소한 김아무개(34세) 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 진찰을 나가서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으며 교도소 및 검찰은 미결수였던 김씨에게 수술을 받고 오라며 1달간 구속집행정지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가족도 돈도 없던 김 씨는 수술은커녕, 자신의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재수감됐다. 3월말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대전으로 이감됐으나 대전에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4월 중순경 외부병원 진단결과는 자궁암 말기며 수술시기를 놓쳤다는 말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환자의 경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 한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 씨는 단 한차례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 씨와 한 방에서 지내다가 6월초 출소한 이아무개 씨는 "교도소측에서는 진통제만 줄뿐"이며 "심지어 진통제가 없을 때는 게

보린을 30알씩 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전중석 의무과장도 김 씨에게 "두 번의 진찰 외에 치료는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주 김 씨를 보고 온 이 씨는 "복수가 차서 임신 7,8개월은 된 것처럼 보이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씨는 면회 후 계장이 쫓아와 '인수자만 있다면 김 씨가 형집행정지로 나갈 수 있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4일 출소예정인 김씨는 별다른 연고가 없어 이 씨와 충남 대천에 있는 한 선교원의 도움으로 생활할 계획이지만 병원비 마련은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씨나 이 씨는 교도소에 재소자 치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형법 26조에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건강보험법 역시 보험대상자에 '재소자와 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재소자의 치료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소자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고 말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되뇌었다. 전 의무과장은 "교도소가 병을 치료해 주는 곳도 아니고 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했을 때 수술을 받지 않은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성인 재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 중 각종 수술 및 치료, 의료보조기구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보영)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 초청 강연회 <버마 민주화운동과 인권>

· 때 : 7월 6일(금) 저녁 7시
· 곳 : 기독교회관 구관 2층 강당
· 문의 : 02-741-5363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2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비상임연구원은 원하는 세미나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간과 조건이 맞으면 선택과목 및 그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비상임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7월 10일까지 '이름, 나이, 연락처, 인권운동 경력, 현재 하는 일, 참가 세미나 과목'을 기록한 자기소개서(A4 1매)를 보내 주십시오.
- 개강 : 7월 19일(목) / 오리엔테이션 : 7월 13일(금) 오후 7시
- 제2기 커리큘럼 및 시간표는
(월) 오후 7시-9시: 근대사(하) / 오후 9시-10시: 정세동향
(화) 오후 7시-9시: 근대 정치사회사상 / 오후 9시-10시: 인권운동동향
(목) 오후 7시-9시: 인권문헌연구(하) / 오후 9시-11시: 영어강독(하)
(금) 오후 7시-9시: 마르크스주의법학(법학 하)
(토) 오전 11시-오후 1시: 일어강독(하)
- 접수 및 문의 : ☎ 3675-5363/ (팩스)3676-1302
전자우편 ihrm@sarangbang.or.kr
- 무료입니다.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⑥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적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내버려지듯, 국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노동자는 이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진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장의 '보호명령서'에 의해 연행되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수감이 채워진다.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설)로 이송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비용과 교통편 등을 이유로, 한 달이 넘게 보호시설에 머무는 불법체류 노동자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교도소까지 분산 수용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차별행위는 무차별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다. 야간·휴일 연장노동은 다반사이고,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더구나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법, '내·외국인 차별금지'

30만에 육박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 적용조차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30조 2항에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리를, 특히 내국인들에게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조직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

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리를, 특히 내국인들에게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조직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

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리를, 특히 내국인들에게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조직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랜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다. 법원에서는 별 이유없이 이를 기각했다. 또 하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 젠더를 강간한 사건이다. 판결에서는 트랜스 젠더가 법적으로 남성이기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이 더 문제인 듯한데?
= 최근에 크게 드러난 일은 방송인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이다. 이로 인하여 홍 씨는 한동안 각 방송사에 출연할 수 없었다.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동성애자임을 주변에 알렸다가 집단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이때 원치 않는 커밍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행자들을 고발하기란 어렵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 국가인권위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테러·폭행·차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경우가 적고, 피해 당사자 또한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피해를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어떤 것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장애차별금지법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또 동성애자들이 안심하고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게 개인신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수자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광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5일(목)

제 18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서울 3백75명, 부산 2백18명, 대구 1백96명, 인천 2백5명, 울산 19명, 경기 2백57명, 강원 52명, 충북 1백26명, 충남 1백61명, 전북 97명, 전남 61명, 경북 90명, 경남 47명 등 1천9백4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 및 주택가에서 연행됐다. 이렇게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강제퇴거되며, 이후 사실상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들, 공포·공포...

지난 달 28일 일산 식사리 가구공단에서는 공단 앞뒤를 막아 놓고 펼쳐진 토끼몰이식 단속에 한꺼번에 1백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의정부 공단지역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 초청 강연회 <버마 민주화운동과 인권>

- 때 : 7월 6일(금) 저녁 7시
- 곳 : 기독교회관 구관 2층 강당
- 문의 : 02-741-5363

을 관통하는 32번 버스, 서울 성수공단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기도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이 기도실에서는 지난 달 27일 20여명이 연행됐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지부장 이윤주)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다. 지난 달 29일 마석 가구공단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 노동자가 낯선 한국인으로부터 "어디에서 일하냐?"는 질문에 놀라 도망쳤다. 이것을 본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따라서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대열을 본 같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산으로 도망을 갔다. 낯선 한국인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 오인한 것이다.

밤중에 산 속에서 통곡

또 지난 6월 25일 방글라데시 국적의 알리 씨는 퇴근길에 자신의 숙소근처까지 경찰들이 따라 온 걸 눈치채고 'POLICE'를 외친 후 가파른 바위산으로 도망쳤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동료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밤 12시경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위산을 찾았더니 신발도 미처 못신고 팬티만 입은 사람도 있었고, 몇 명의 노동자는 끼이끼이 울고 있었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판단에 의해 '긴급보호' 형식으로 연행되는 이들은 이를 동안 조사받다가 출입국관리소장

혹은 사무소장이 발령한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정원이 넘칠 때는 교도소까지 가서 지내기도 한다. 이렇게 10일을 기다리다가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되다가 본국으로 쫓겨난다. 교통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는 것이 보통. 이때 일자리 없이 잡힌 노동자는, 친구나 본국에서 교통비를 지불해주지 않는 한, 몇 달이고 구금되기도 한다.

불법체류 묵인·추방 반복

이주노동자 지부는 지난 3일 성명에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은 "20만 명 이상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켜 노동권을 유린한 것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물로 불법체류자를 포획하는 파렴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같은 날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필요할 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필요 가치가 없어지면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쫓아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지부와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공대위는 한 목소리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즉각 사면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공대위는 지난 3일 1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노동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강제추방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 4일 대구 외국인 상담소 등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사냥' 중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부는 5일 오전 10시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강제추방 규탄 투쟁대회'를 연다. (심보선)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⑦(끝)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동가. (편집자)
참석 : 박경석(노동장애이냐학, <석>),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균>), 이원재(문화연대, <재>), 장여경(진보네트워킹센터, <경>), 정종권(민중연대, <권>)

(☞ 3면에 계속됩니다)

사회: 국가의 인권침해에 인권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균> '4·10 부평만행' 같은 폭행 등에 대해 인권위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특히 사인간에는 평등권침해만을 진정할 수 있는데, 노사쟁의 현상 '용역깡패'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 최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탄압보다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자퇴생모임 사이트 폐쇄 등은 그 예이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청소년보호는 피지배 계급 안에서의 갈등도 불러온다. 지배계급에 의한 통치전략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겠지만, 당사 노동자들이 두들겨 맞고 잡혀가게 되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

<경> 최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분사될 한국통신 114의 수익 모델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발달해 작업장 내 감시의 문제가 제기됐고, 유전정보기술의 발달로 유전정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생기고 있다. 이때 "실사 아무리 명분이 훌륭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나의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명확해져야 한다.

<석> 예바다 시설비리 문제는 장애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다. 공금유용, 후원금 착복, 원생들에 대한 성적 유린, 강제노역, 의문사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예바다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 이런 문제는 시장, 경찰, 유지 등 지역사회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이해와 관계없는 국가인권위가 존재한다면, 시설비리 문제는 상당히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를 차별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모든 버스에 장애인이 탈 수 있으려면 당장 돈이 문제가 된다.

<균>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철거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법에 의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철거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치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에는 이것조차 없다. 철거민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정책권고 차원에서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권> 현재 노동위원회를 보면, 결정된 사항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무슨 제도든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라고 정책적 권고를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처벌조항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 노동위원회가 국가나 당사자에 대해서만 발원할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는 밖에 대해서 발원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리다. 국가인권위는 비록 강제권은 없지만 '어떻게 여론을 활용하고 밖과 협력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재> 국가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인권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경>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등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기술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 한국에서는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고 마음대로 취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명시해야 한다.

<권> 최소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인권사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해 명시적 단계들을 거치도록 신경써야 하겠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진 후 피해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석> 소수자 차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남녀차별금지법 같은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차별은 피해를 당하는 소수자에게는 사회적 '배제'를 뜻한다.

사회: 국가인권위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는 부분은 사인간의 차별이거나, 아주 미약한 인권침해 사안일 것이다. 사인간의 문제에서 조사 후 권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발과는 달리,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

사회: 이번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석> 장애인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장애인을 당연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길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됐을 때, 무지로 인해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경>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은 청소년노동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들은 근기법도 제대로 모르고 현장에 갔다가 엄청나게 착취당한다. 노동권에 대한 개념이 의무교육에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 사실 인터넷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때 차단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인터넷 활용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하다.
 <재> 인권교육은 주입식이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권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개념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배우는 과정이 인권교육의 핵심이다. 또 정보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사회: 국가인권위의 권리구제 부분도 이야기해 보자.
 <경> 국가인권위의 조사기간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세월이 네월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권> 조사기간의 문제는 신속구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경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권위원이 고의로 조사기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조사기간에 대한 강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권> 국가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인권개선이나 인권발전을 위해 국가인권위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야 보아야 한다. 법무부나 검찰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유리한가? 물론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공방과 싸움이 존재하나, 인권과 반인권의 충돌은 오히려 국가인권위 외부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경> 사실 국가인권위 자체는 빈 백지상태에서 공간을 열어준 정도를 의미한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일단은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재> 국가인권위는 아무리 강제력이 없어도 국가기구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어쩔거나 국가기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반대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균> 우리 사회는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 국제법을 적극 소개하고 우리 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인권위가 해야 할 것 같다. 권리구제 대상에 사회권 부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적어도 국제법에 나와 있는 사회권을 충분히 교육하고 제안해야 하겠다.

사회: 국가인권위는 사실 인권단체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면 도와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판해야 하겠다. (정리: 범용)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히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영수 위원장, 김성철 조지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3년 전부터 별 일 없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돼 왔던 관행을 깬 이래적 조치였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별도의 임금조정만 있었다. 사측은 4일 현재 명월관노조 조합원 어느 누구와도 고용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관례를 깨고 별다른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노조 설립신고서를 관공구청에 제출하고 몇 차례 항의집회를 연 것이 진짜 계약해지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월관 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명월관 노조는 '워커히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미 4차례나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법외노조'다. 명월관 노조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이후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심태섭)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건에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다"며 "IC칩을 삼삼·현대 등이 생산할 수 있으나 수요가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3일 성명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졸속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또 "더욱이 재벌기업의 수요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속내까지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에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전 내역만 수록된다고 밝혔지만 상장 법안에는 카드 정보를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수록정보의 중요 사항들을 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6일(금)

제 18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김대중 정권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가 "서울 4대문 안쪽 등 주요 도심지의 집회참가 인원을 5백명으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대회나 민중대회 등 각종 대규모 집회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집회의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 도심집회의 경우, 집회참석을 선착순으로 제한해야 될 판이다. 앞서 1일엔 집회와 시위에서의 대형 엠프 사용을 금지하고 확장기 사용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흘리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뿌리채 뺏아내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당국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떠보는 수준이지만, 시민사회의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경우 계획대로 집시법 개악이 추진될 상황이다. 집시법 개악에 앞서, 이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조치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시위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도 집회참석자들을 마구 연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만 △7월 3일 낮 12시 서

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던 건설운동노조 조합원 40여명 연행. 사유 : 신고된 숫자인 50명을 넘어 8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7월 3일 저녁 7시 55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 연행. 사유 : 집회종료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7시 30분보다 25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했다는 것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주최자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집시법 제14조), "위법사

항이 있을 때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시법 제18조)는 규정들을 근거로 대고 있지만, '현저한 일탈'이라거나 '상당한 시간'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악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으로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종로경찰서 측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 연행·구금했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이 걸으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년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앞으로 7회에 걸쳐(매주 1회씩) 교도소내 가혹행위, 재소자 권리구제 방해, 의료, 작업과 교육, 주부식과 구매, 민영교도소, 국가인권위원회 시대의 감옥인권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 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84년 10월 12일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서 집단구타와 일명 '비너꽃기'와 '통닭구이', '관절뽑기'와 같은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터였다.

지금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재소자와 출소자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답변은 한결같다. "그런 일 없었다"는 것이다. 의혹은 무성하지만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 우리 감옥의 현실이다.

구타 견디다 못해 자해도

양만신 씨의 사례는 감옥 내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것이 어떻게 은폐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93년 6월 14일 낮 12시경 대전에서 이감되는 재소자 20여명이 청송제2교도소에 도착했다. 차멀미로 뒤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리던 양만신 씨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말과 함께 교도관 10여명에 의해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 3-4시간 가량 물매를 맞았다. 한 교도관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양씨의 입안에 흙을 퍼넣기도 했다. 제대로 설 함조차 없어 기어다닐 정도였지만 양 씨는 같이 이송된 무리에 끼어 얼차레까지 받은 뒤에야 입방할 수 있었다.

이감 온 다음날엔 재소자 준수사항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동인원 전원이 식구통 밖으로 발을 내민 상태에서 교도봉으로 발바닥을 맞았

다. 그 다음날엔 순시중이던 소장에게 교도관들의 구타사실을 말하고 처벌을 요구했다가 관구실로 끌려가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또 한 차례 구타를 당했다. 그 후에도 수난은 계속됐다. 암기사항(징벌규칙 등), 복창소리, 방안정리, 정좌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며 구타가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양 씨는 가혹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93년 9월 7일 귀두를 자르는 자해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교도관들이 입에 방성구를 씌워 의사와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수술 후 교도소로 돌아왔을 땐, 징벌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9월 20일경부터 시작된 징벌은 2개월 여만에 끝났지만 94년 7월 8일까지 약 10개월 가량 수갑을 차고 생활해야 했다.

양만신 씨는 99년에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이제 양 씨가 기대할 것은 민사소송의 결과뿐이다.

'가혹행위 호소' 줄이어

청송 외에도 대전을 비롯해 안동, 원주, 마산, 영등포, 서울 등 각지의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재소자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안동에서 출소한 조규선 씨는 98년 11월경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 당한 고문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조씨는 "수갑과 포승이 채워진 상태에서 정해우 보안계장의 지시로 교도관들에게 통나무 2개를 다리에 끼워 양쪽으로 벌리는 관절뽑기 고문과 비너꽃기, 손가락 찌기 등을 당했고 곤봉으

로 발바닥도 맞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혹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하실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찬 후 들어올려 양손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출소 후 생업에 쫓기는 조 씨는 사법부의 심판을 호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청산 못한 일제시대의 관행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재소자와 출소자는 대개 비슷한 절차를 경험한다.

교도소측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항의하다가 '난동자'로 지목돼 관구실이나 보안과 지하실로 끌려간 뒤 교도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다. 대부분 수갑과 혁수정을 차고 쇠사슬에 묶이고 안면보호구까지 쓴 상태에서 얻어맞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힘들다. 흠뻑 두들겨 맞은 뒤에 자신의 '난동'이 어떻게 관규를 위반한 것인지 교도관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쓰고, 그 다음엔 징벌을 받는다.

징벌이 결정되면 각종 계구가 채워진 채로 0.75평의 작은 방에서 혼자, 때로는 두세 명이 엇갈려 누운 채 지내야만 한다. 누운 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식판의 밥을 먹어야 하고(그래서 개밥이라 부른다), 대소변도 누워서 볼 수밖에 없다. 그 기간 동안 면회와 서신은 금지되며 건강진료조차 중단된다. 징벌이 끝나면 오래지 않아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고, 이감된 곳에서도 청원이나 고소장 발송을 요구하다가 또다시 가혹행위를 당한다.

이런 '관행'은 고문을 일삼던 일제시대 교도관들의 행태가 해방 후에도 근절되지 못한 탓이다. 지금껏 고문교도관이 처벌된 사례는 눈 씻고 봐도 찾아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혹행위를 하고도 버젓이 현직근무가 용인되는 실정이다. 박영두 씨를 고문했던 교도관 가운데도 두 명이 공직에 남아 있다. 가혹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엄중한 처벌이 정착되지 않는 한 감옥은 언제까지고 살벌한 세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7일(토)

제 18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91년 '5월 정국'에서 최대의 '유서대필 사건'을 불러온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분신자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법정 밖에서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유서대필 사건' 규명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강경대 치사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상태였다. 박승희 열사를 시작으로 정권에 항거하는 분신은 계속됐고, 이 와중에 김 씨도 분신을 하기에 이른다. 이때 검찰은 김 씨가 남긴 유서가 동료 강 씨에 의해 대신 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 씨의 죽음은 물론 민주화운동 전반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끓어오르던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국면의 전환을 꾀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 분신자살의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자살방조행위"라며, "(유서대필 행위)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매도했다. 법원도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91년 12월 20일 자살방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곳곳에

서 드러난다. 공판 도중 변호인 측은 유서대필체가 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필적감정 결과만 인정됐다. 김 실장이 92년 2월 17일 뇌물을 받고 허

위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그의 감정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김 씨 부모에게 확보한 필적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를 작성한 홍 모 씨는 93년 10월 11일 실장이 92년 2월 17일 뇌물을 받고 허

(→ 2면에 계속됩니다)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인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당국이 집회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폭력예방, 평화시위 정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경찰의중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9년 쥐도 새도 모르게 개악됐던 집시법이 한결 더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집회참석자의 숫자를 법조문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정권차원의 전면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현 정권은 이미 온라인공간에 족쇄를 채우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가상연좌시위와 같은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 것이다. 이제 그 도발이 온라인공간을 넘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전반을 유린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새로 시행된 통신관련법에 의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공간의 각종 표현은 검열과 통제의 울가미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에 익숙해질 것이며, 결국 온라인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폐 폐 논쟁 속에 잠시 움츠러들었던 악법이 다시 적극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오랜 세월을 걸쳐 힘겹게 쟁취한 '민주와 인권'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길 처지인 것이다. 이대로 정권의 공세에 밀려 영원히 재갈을 물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현)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첫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뼈대를 이룰 인권위원장 이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회) 어떤 모습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모범을 보이느냐가 (인권위원회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며 “인권위원 임명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은 인권위원 선출에 앞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들이 선정된 뒤에도 최종선임에 앞서 인권위원으로서의 흠은 없는지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이상 각 부와 정당은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익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과거에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거나 부패경력 등을 가진 사람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인물은 결코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모두 11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4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에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을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보선)

‘건강한 노동·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건강연대’가 탄생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만들기라는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중부경찰서 앞 신원빌딩에 새 등지를 들었다. 공동대표에는 원진녹색병원 임상혁 산업의학과장, 한림대성심병원 주영수 산업의학과장.

‘노동건강연대’는 30일 창립식에서 “산재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과감한 개혁투쟁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감시팀’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관련 주요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직업병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 규칙을 분석하는 등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시, 견제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정부투쟁’을 강조했다. 전수경 사무국장은 또 “다리푼이 들더라도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뉴스레터와 소책자를 배포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교육과 대응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269-3891 (김일숙)

(→ 1면에서 계속) ‘90시간에 가까운 감압수사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감신욱 감사의 압박에 못 이겨 검찰 의도대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감 씨를 변호했던 이석태 변호사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대해 ‘김 씨 자신이 감 씨에 의해 유도된 죽음이 아니라 본인의지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환영을 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유서대필 문제가 해결돼야 감 씨의 명예회복이 완전을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화보상위 조명우 지원과장은 “별다른 이견 없이 김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면서 “유서대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과장은 “결정을 내린 후에 검찰 등에서 항의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재심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으로 재심이 가능할 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말고도 사회여론을 환기시켜 역사적인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용)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까지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서문)

주요내용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보고서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6·15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 규정 /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 가격 : 8천원 (우편주문시 우편료 별도) / · 문의 : 이창조(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0일(화)

제 18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경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모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리는 혼란을 틈타 보도블록을 영업용 택시에 던진 것. 이후 윤 경사는 현장에 있던 시위대들과 택시기사에 의해 잡혀 경찰 신분은 밝혔으며, 개인적으로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보상금 2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

이에 대해 윤 경사는 “진압부대가 시위대를 밀고 올라간 후, 진압부대 뒤쪽에서 길 북판에 있던 보도블록을 바깥쪽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거기 택시가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김봉화 교육선전부장은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쫓아오다가 잠시 멈췄을 때, 윤 경사가 진압경찰 앞으로 나와 택시를 향해 돌을 집어던졌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김 교육선전부장은 “현장에 있던 시위대들의 증언과 채증한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돌을 던진 것이 분명하다”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경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박배일 본부장 직무대행은 “경주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연행된 노동자들 경찰서 내에서 구타한 후 수세에 물리니까, 폭력시위를 조작, 국면전환을 시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주경찰서는

금속연맹 이진라 부위원장이 연행이유를 묻자 “이 빨갱이 씨끼, 입다물지 못해!”하며 주먹을 안면부에 날리고, 이에 항의하는 발레오만도노조 김동완 대의원의 고개를 강제로 숙이게 하고 목뿔줄기를 둔기 같은 것으로 강타했다고 한다. 현재 김 대의원은 거동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부위원장은 목에 기브스를 한 채로 구속됐다.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지난 6월 26일 서민노회 활동가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해간 경찰이 연이어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와 형사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아래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부친 생신을 맞아 조치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 신당동 자취집을 나서던 황대변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형사들에 연행돼 10일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오후, 연행 소식을 전해들은 범청학련·범민련·덕성여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학생 40여명은 장안분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황 대변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황 대변인을 접견한 김승교 변

한편 검찰은 전국 53개 지검·지청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4월 21건의 피해사태를 접수하고 이 중 3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손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지난 달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시위대가 던진 돌에 자동차 유리 파손돼 1백21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시위대를 가장한 그 윤모 경사가 잡히지 않았다면 ‘노동자가 시민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이고, “이후 집회에도 폭력집압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용)

호사는 “황씨가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참가하려고 했던 것을 경찰이 문제삼은 듯 하다”며 “이번 연행은 지난해 황 씨에게 행해졌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온 활동을 근거로 6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황 대변인이 10일 현재 자신의 신분 확인을 제외한 모든 심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98년 통일대추전’ 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같은 해 10월 구속돼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년 8월 15일 행정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황 대변인은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 규정을 받고 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심태섭)

◎ 신운동목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Papa Don't Preach (아빠 설교는 이제 그만)"
양극한 노래였다. 80년대 중반 '까진' 미국 10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돈나의 노래 'Papa Don't preach'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윤리'를 둘러싼 싸움이 한창이다. 정통윤 등 민간심의기구의 성격이 여전히 의문시되긴 하지만, 국가검열이 형식적으로나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금, 시민사회의 대표를 자임하는 윤리의 경찰들이 나타났다.

윤리를 둘러싼 싸움은 시민사회의 지형을 새롭게 그리기도 한다. 전교조 교사 해직이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섰던 참교육 학부모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어도,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율윤리는 결코 '우기는' 방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요된 윤리는 나이주의 위계 속의 소수자인 청소년, 이성에 중심사회의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신운동목 (한겨레 21 기자)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 관련자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김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2. 2001년 여성주간,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선포
여성부,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책임의 공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동등한 행사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7.3)/ 김대통령 '여성주간' 기념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공직 임용·승진 인사에서 여성을 과감히 발탁하겠다.'(7.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남녀평등법 제정 계획 "2010년까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중심으로 20%까지 채용"(7.3)/ 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 해고 직장상사 복직 결정한 지 노위 결정을 파기한다."(7.3)

3. 민주노총, 7·5 총파업 진행
청와대, "단병호 위원장 등 수배자 제외한 민주노총 대표자들과 면담하겠다" 민주노총 면담 요청 사실상 거부(7.2)/ 노동관계장관회의, "민주노총이 법집행 방해하면 사법처리"(7.3)/ 여·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구호로 삼는 민주노총 파업은 안될 말"(7.4)/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감려한 대정부 투쟁 펼치겠다"(7.5)/ 노동부장관 "불법 파업·폭력 시위에 형사 면책은 없다"(7.5)

4. 집회·시위의 자유가 뿌리 채 흔들린다
종로경찰서, 신고한 집회시간보다 25분 더 했다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연행(7.3)/ 종로경찰서, 신고한 사람보다 집회 참석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건설운동노조 조합원 3명을 연행(7.3)/ 서울지검 공안2부 집시법 개정 추진, "교통 혼잡·생계 위협 야기한다며 도심집회 참석인원을 5백명으로 제한"(7.5)/ 종로경찰서, 연행한 전교조 교사 2명을 구속(7.8)

5. 여러 소식
유럽지역경제정상회의 개막, 세계경제포럼(WEF) 주관 잘츠부르크에서 NGO 활동가들 '반세계화 외치며 격렬 시위'(7.2)/ 김동민 용산경찰서장 전보, 의경 가혹행위 책임 물어(7.2)/ 일본, 오키나와 현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을 직접 구속(7.6)/ 비정규직노조, "연대 투쟁으로 승리하겠다" 건설운동노조·한국통신계약직노조·인사이트코리아노조·캐리어사내하청노조·방송사비정규직노조 연대 집회(7.7)/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1일(수)

제 18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검거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들어가려던 '반드시'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명동성당에 기도하러 가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도 성당에 들어가려는 문정현 신부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의 공공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단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령을 피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경찰이 명동성당을 출입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명동성당의 나이 지긋한 할머니 신도 등을 무차별로 검문하자 이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 사이트(www.nodong.org)에 소개된 '대응지침'에는 불심검문을 하려고 할 경우 "경찰에게 먼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묻고, 자신이 '범죄인' 혹은 범죄행위를 아는 자라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검문을 거부해도 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요구해서" 혹은 '민주노총 때문에'라는 말도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검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대응지침'은 "신분증과 소속, 이름을 대지 않고 검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적어 두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구속영장이

나 본인의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이라고 강조한 후, 만일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갈 경우에는 구속영장 등을 요구하고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의동행할 의사가 없는 한 거부하라고 밝혔다. 또 "불심검문은 '질문'하는 것이지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색영장의 제시 없이 소지품 검사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응지침'은 "무차별 불심

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며 "(경찰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적인 검문 검색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은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갈 분량으로 편집해 조합원들이 프린트해서 소지하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인서 씨는 "그 동안 명동성당에 '그냥' 신분증을 보여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대응지침"을 계기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우리는 지금 인권의 세계로 간다!

어린이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2001"

인권이 너무 어렵다고요? 인권캠프에서는 놀이, 춤, 그림, 문화활동을 통해 사람과 인권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인권을 지키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 ① 때 : 8월 8~10일(2박3일) / ② 곳 : 경기도 양평 청운인성수련원
③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선착순 30명) / ④ 참가비 : 6만원
⑤ 주요프로그램 :

- 인권과 친구하기 1, 2, 3/ 놀이, 그림 등을 활용해 인권이 무엇인지 배우고, 체험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이들의 언어로 다시 만들어본다.
- 인권체험놀이/ 장애마을, 말할 수 없는 마을 등 5개 마을을 여행하며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다함께 생각한다.
- 인권의 옷을 입자/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을 옷에 그림으로 표현한다.

2001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 ① 때 : 7월 26일 - 28일 / ② 곳 : 예수살이 공동체(서울 합정동)
③ 인원 : 30명(선착순) / ④ 참가비 : 5만원(숙식, 자료집 포함)
⑤ 주요내용 : 인권이란/ 인권교육이란/ 인권교육방법론 실습/ 커리큘럼 설계/ 기존 교과목과 인권교육 접목/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

· 참가신청 : 인권운동사랑방(T:741-5363/ F:741-5364)
E-mail : youth@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 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서울지검 공안2부가 '주요도심지 집회참가 인원제한' 등 집회및시위에 관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원의 인위적 제한과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집시법 개악방안은 사전에 집회시위의 범위와 인원, 시간, 방법 등 모든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도 9일 발표한 성명에서 "7월 3일 전교조가 해산시간을 10여분 어겼다고, 7월 5일 민중연대 집회가 신고인원 보다 10여명 초과했다고 해산하더니 끝내 전교조교사를 구속시키는 판"에 "(집시법 개악 보도에)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는 "(집회인원 제한) 발상이 일개 지방검찰청의 간부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저항과 투쟁의 여지를 봉쇄하고, 모든 비관행동을 불법과 처벌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정권의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또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것"이라며, △대사관 및 외국공관 1백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 △주요간선도로에서 집회제한 및 금지 조항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해온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본질적 요소"라며 "정부가 집시법을 개악하려 할 경우 최대한의 역할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2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집회참가 인원 최대 5백명 제한 검토'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었다. 민중연대 등은 또 집회시간을 넓혔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된 예 등을 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심보선]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01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월64만1천1백62원을 전제 노동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인 51만2천9백30원으로 수정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번에 제시한 급여를 단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천2백70원, 일당 1만8천1백57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노총은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2003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수준까지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현실

화로 저임금해소·소득불평등 해소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감독 철저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경총 앞에서 참여연대·민변·외노협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안으로 현재 수준보다 1만원정도 인상된 43만8천여원을 제시한 바 있다. [심태섭]

버마 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방문일정을 공식적으로 마쳤다. 산 아웅 의원, 수 아웅 등 태국 방콕에 있는 버마 망명의회 외무위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박경서 인권대사 등을 만나 최근의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버마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가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와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이 그 중 하나다. 또 재판 없이 구금됐던 37명의 국회의원들 중 27명이 풀려났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버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민주화 운동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일례로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 아우슈, 턴 우 등 민주화 운동 지도자 3명이 여전히 연금돼 있고, 1천8백 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감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군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2일(목)

제 18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전화번호 모두 파악

"지난 2월 12일 016 PCS폰을 개통한 ㄱ씨는 5월초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ㄱ씨의 행보가 궁금했고, 그래서 한국통신프리텔에 당시 ㄱ씨의 통화내역을 요청했다. 한국통신프리텔은 곧 경찰의 요청에 응해 ㄱ씨 PCS폰의 상세통화 내역서를 회신했다. 이 통화 내역서에 의하면, ㄱ씨는 3월 8일 늦게까지 종로에 있었으며 보통은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14일 ㄱ씨는 총11곳에 모두 17번 통화를 했다. 아침에는 대방동에 있다가 점심 무렵 경기 고양시 화전동으로 이동했으며, 2시경에는 다시 신촌으로 돌아왔고 3시경 동대문으로 출발했다."

경찰은 당신이 어디에 갔는지 안다

이상은 한국통신프리텔에서 5월 7일자로 경찰청장에게 회신한 공문내용을 보고,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을 유추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핸드폰의 상세통화 내역서에는 통화시각, 상대방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용기자기국명까지 나타나 있어, ㄱ씨의 하루를 대강이나마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는 핸드폰 통화내역이 개인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경찰에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

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내역 조회, 영장이고 뭐고 없다

한국통신프리텔 5월 7일자 회신 공문을 접수했던 경찰청 정모 형사는 "수사상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내가 그것까지 말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고, 어디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느냐는 질문조차 "수사를 담당하는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마치 보안사항인 양 이야기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 몇몇 관계자도 법적 근거를 못 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경찰서장 명의로 한국통신 등에 요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까지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서문)

주요내용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보고서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6·15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 규정 /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 가격 : 8천원 (우편주문시 우편료 별도) / · 문의 : 이창조(741-5363)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전세계 정부·비정부기구들이 한데 모여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이번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치러지는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치러지는 비정부기구(NGO) 포럼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되는 정부간 회의가 그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마치며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8.31~9.7, 남아공 더반, 전세계 정부기구, 민간단체 참가

유엔은 전지구적으로 만연해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30년이라는 기간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이미 두 차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치른 바 있다. 올해 열리는 대회는 지난 8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래로 18년 만에 열리는 것. 7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20년도 더 지난 올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의 주제는 '난민, 이주노동자, 카스트제도, 종족살인' 등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정부·비정부기구들이 제안한 '과거 서구·일본 등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요구'는 이번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분쟁도 이번 대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대회에 과거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를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97년 52차 유엔 총회에서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최'를 결의한 이래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으로 나뉘어 지역 회의를 가져오면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채택할 선언과 행동강령을 각기 준비해왔다. 올해 들어 아시아지역에서 2차례에 걸친 대회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주로 제기된 문제는 인도의 카스트제도, 이주노동자 문제이며, 북한 당국이 주도해 쟁점으로 부각된 '일제식민시대 당시 발생한 학살·만행' 문제도 중국·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지난 6월부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6월 이래로 두 차례 지역회의에 참석한 이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단일민족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은 사회 안에서 여태까지 인종차별을 받아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결코 인종차별문제 지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인종차별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오는 7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팍스 로마나'의 사무국장 이성훈 사무국장을 초빙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사무국장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의 의의와 한국엔지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이주여성인권연대와 민변도 인종차별철폐회의 시각으로 접근한 이주노동자·난민 인권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심대섭)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7월 18일 오후 3시)

·문의 : 이주여성인권연대 강은경 사무국장 051-802-3438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가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은 것이다. 따라서 김두만 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에바다공대위에서 추천한 이사 5명, 옛재단측 이사 4명이 에바다복지회 이사진으로 구성돼 앞으로 에바다복지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에바다복지회 옛재단측 이사인 최 씨는 지난 3월 열린 에바다이사회에서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안건상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2일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심보선)

(→ 1면에서 계속)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핸드폰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가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서장의 공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 일자에 관한 자료만을 열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어디에도 통화시각, 기지국명 등 이를 넘어서는 정보의 조회를 가능케 하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 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3일(금)

제 18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 (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가 12일 파견근로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파견근로자를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대우캐리어 이00 관리이사, 파견업체 (주)청우 이△△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작 노동절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일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 해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4월 30일 본사 관리직 사원 2백여 명이 광주 현장에서 대기 △토마스 데이비드 사장이 5월 2일까지 공장을 정상화하라고 지시 △회사 기자재인 지게차 동원 △사회통념상 생산시설내의 기물을 파괴하면서까지 농성을 해산한 것은 회사측의 사전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구사대와 경비용역의 폭력을 수수방관해 사태를 확산시켰"으며, "폭력사태로 하청노조원은 7명이 구속됐지만 회사 관계자는 한명도 구속되지 않아 사용자 배후기식 편파수사 관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민변 소속 김도형, 김기덕

변호사, 민중연대(준) 정종권 정책기획실장, 파견철폐공대위 정지현 집행위원 등이 참가한 '캐리어 폭력사태 진상조사단'은 광주 현지에서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이경석 위원장 및 장권기 위원장 직무대행, 대우캐리어(주) 정종록 관리팀장, 정재모 인사팀 차장 등 회사관계자, 강진성 광산경찰서장 등 경찰관계자 그리고 4월 30일 폭행당한 한승륙 조합원과 그 가족 등을 면담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변은 특히 지난 4월 29일 경찰에 연행된 캐리어 사내하청 한승륙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사 의혹에 대해 △한 씨 주장이 일관되고 △한 씨

가 붙들려있던 경찰기동대 봉고차 안에 쇠파이프가 여러 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경찰이 4차례나 비공식적으로 한 씨 가족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전후사태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씨가 지난 4월 29일 공장에서 용역경비와 구사대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치료비를 십시일반 건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력행사가 경찰 측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폭행에 대해 수사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쨌든 경찰의 폭력행사 사실을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대우캐리어 해결책으로 △사용기간 2년이 넘는 사내하청노동자 89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경찰의 한 씨에 대한 폭력사실 시인 및 배상 △한 씨 폭행 가담경찰관 및 은폐기도 책임자 처벌 △캐리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심보선)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지난 봄 안동에서 "우표모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뜸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폐,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 저지 철폐...' 같은 요구사항이 쓰여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부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로 인정,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이 몸을 건 투쟁의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들어온 재소자'들에게 권리라는 말은 어색하지만 하다. 이런 재소자들에게 교도관들은 하늘처럼 군림하며 이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소자들은 '죄값을 치러야 하고' 지옥에 떨어진 '하급인생'일 뿐이다.

현재 재소자들에게 면담, 청원, 소송 등의 권리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행정법에는 재소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항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도관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을 전제로 서신, 접견, 면담, 청원, 소송 등의 기본권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다.

행정법 8조의 2는 '소장은 신입수용자에게 형기와 접견 및 서신, 규율·징벌 및 청원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율과 징벌을 제외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고지 받은 재소자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다.

재소자의 심증판구는 행정법이나 청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 허다하다. 오죽하면 출소자들은 "재소자가 행정법만 알아도 교도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소자는 서신이나 접견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열로 인해 재소자의 편지는 '허위사실 기재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허되며, 심지어 법원은 관례를 통해 검열을 인정하기도 했다.

변호사접견까지 불허

인권단체나 언론사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불허가 관행화된 우리현실에서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 교도소에 대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일반접견의 경우 재소자들은 주눅이 들어 자신의 사정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변호사와 재소자의 접견을 불허하기도 한다.

지난 2월 전주교도소는 조두연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했으며 지난 6월에는 변호사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접견할 것을 요구해 불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5월 목포교도소는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재소자와 박승욱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한데 이어, 박 변호사가 제심청구를 위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도 접견을 불허했다.

청원·소송 제기하기도 어려워

주1회 이상 의무화적이던 소장의 재소자 면담 조항이 삭제돼 소장에게 직접 호소하기란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제도 역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도관들이 청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집필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법무부가 청원서를 접수받은 후에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일선에서 법무부에 발송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된다. 어렵게 제기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소송중이거나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등등...'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편 모 씨는 지난해 출소 때까지 이런 답변서조차 받지 못했다.

소송도 청원과 다르지 않다. 광주에 수용중인 양만신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6년이 걸렸지만 결국 공소시효 2일을 앞두고 무혐의 처리됐다. 유득형 씨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징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치고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관들이 고소장취하서를 위조해 접수시킨 사실을 출소 후에 알게돼 징상규명에 나선 대한변협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도관들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오히려 윤씨가 무고죄로 고소된 상태다.

"추가 형을 각오하라"는 협박

"나는 옷 벗으면 그만이지만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추가(형을) 각오하라"는 말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다. 협박인 것이다. 오히려 교도관이나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인권운운하며 고소장을 남발해 교도관 인권이 사라지고 업무가 마비될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밝힌 '재소자 (1년 수용자가 약 6만명) 고소·고발건수는 98년 22건, 99년 48건, 2000년 8월까지 23건으로 총 93건이지만 36건이 불기소 처리되고 57건은 진행 중'이라는 적은 교도관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4일(토)

제 18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지난 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지난 12일 △전공련 지도부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간대 이어 부공연 이용한 대표, 경공연 김영길 대표, 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이 부산 남천성당, 경남청원 사과성당, 인천 산곡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련은 이날 공무원노조 공대위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탄압사실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등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 경남 창원, 인천 등에서도 지역 공무원노조 공대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련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강행할 경우 정시 출퇴근과 집단휴가 말고도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명동성당에서 만난 차 위원장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행사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며 "나를 비롯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태복 복지수석이 '노사정위에서 공무원

노조 인정시기 논의'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인정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부딪히기 꺼려로운 사안을 취급하는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에 (→ 2면에 계속)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외침이 2001년 서울 한복판에서 짓밟히고 있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 항목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철 것은 뻔한 일이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망이 용솨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다.

5백여 레미콘기사들이 96일째 파업중이다. 그들과 수많은 가족들이 외치는 요구는 당황스럽게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레미콘노조는 지난해 9월 영등포구청에서 설립필증을 받았고, 지노위, 중노위로부터 합법 노조임을 인정받았으며, 올 4월 인천지법이 노조활동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레미콘업체들은 '노조 절대 불가'라는 빗장을 지르고 이 모든 절차와 결정을 깡그리 무시해왔다. 특히 레미콘연합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이사인 유재필은 해고와 무더기 소송, 심지어 용역장폐를 동원한 폭력 행사로 노조 죽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지목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노동부는 레미콘업체를 상대로 한 100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중 50건 이상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재필 등에 대해서는 구속품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레미콘 사업주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벌어진 건 정반대의 상황이다. 구속당한 건 용역장폐에게 폭행 당한 노동자요, 도끼와 해머로 강제해산 당한 것도 노동자요,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연행된 사람도 다름 아닌 노동자다.

레미콘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일들은 정부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구분하여 따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오죽하면 레미콘노조의 법적 자문을 맡아온 변호사가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 여름 노숙 단식농성에 나서게 되었겠는가.

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사주편들기에 나선 정부야말로 국민의 생존을 불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레미콘노조는 레미콘기사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이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야 현 정부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를 부식시킬 불량레미콘과 다를 바 없다.

'글리백'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인의협)와 혈액종양 환자모임인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백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백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백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책정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격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면 글리백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월 3백~4백5십만원에 달하는 약값 가운데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적용이 편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늘이는 대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줄여준 본인부담은 난치성 질환자들의 주요부담원인인 입원비가 아닌 '외래진료비'에 한정됐다. 그마저도 본인부담을 20%혜택을 받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난치성 환자들로 한정되었다.

이에 인의협·새빛누리회·건약 소속 회원 30여명은 13일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사옥 앞에서 시위를 통해 "백혈병환자는 살고 싶다", "환자의 생명보다 이익이 먼저인가"라고 호소하며 글리백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성인 난치성 환자의 본인 부담을 현행 50%에서 20%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으로 약값부담을 덜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시위는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높은 약값 때문에 치료 못받는 사람 있다

인의협 관계자는 "급성기/가속기/만성기 백혈병 환자가 투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약제인 글리백은 보험적용을 받아도 본인부담금만 월150~200만원에 달한다"며 "노바티스의 높은 글리백 약값은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독점횡포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난치병 환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관계자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높은 약값을 받는 것은 비단 한국노바티스 뿐이 아니다"라며 "다국적 기업이 이러한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투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건강권은 계속해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홍보부 관계자는 "스위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에서 '모든 나라에서 동일약품에 대해 동일가격을 고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히고, "본사가 정한 가격을 한국지사가 변경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태섭)

말레이시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6월에 이어 국내보안법 희생자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대학 학생대표인 모하메드 후아드모드 이크완 씨를 영장 없이 구속했다. 경찰은 8일 모하메드 후아드 씨가 국내보안법 제73조 1항을 위반했다고 가족에게 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카마히안 말라 인스티튜트의 학생운동 지도자인 카이롤 안와르 아메드 자이누딘 씨가 연행됐다. 카이롤 안와르 씨는 지난 6월 8일 국내보안법 반대시위를 한 6명과 함께 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 왕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현재 가족들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9일 안와르 전 총리 유죄판결 2주년 기념집회를 준비하던 사회단체활동가 10명이 연행된 이후에 다시 국내보안법을 발동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방이, 켈라나 자야 지역의 학생거주지를 급습한 적도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보안법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수아람(SUARAM)은 이런 조치들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술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이후 보안법은 정부비판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용됐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외의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수아람(SUARAM)은 현재 국내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든 수감자의 석방, 공개재판 그리고 국내보안법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재판도 없이 지난 4월 연행된 이잠 모하메드 노어, 티안 추아, 히사무딘 라이스, 사리 순집 등 "내무부장관의 구금명령에 따라 2년 간 구금이 결정된 4명의 수감자"를 돕기 위한 온라인 탄원서명운동 결과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전달했다. (박수영)

(=>1면에서 계속) '이미 10년 전 (87년)에 우리 당(평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가 비도했다'고 말한 후 '내가 되면 당연히 허용한다'고 말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시기상조 운운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12일 전권련 중앙위에서 노조 추진기획단을 결성해 노조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공무원노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7일(화)

제 18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레미콘업체들이 노조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배수의 진을 쳤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고 전국 건설순송노조(위원장 장문기, 레미콘노조)의 인정을 위해 나서라는 것.

이를 관철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명동거리에서 레미콘 노동자 300여 명은 '조합원 50명 집단단식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했으며, 레미콘 노조의 법률자문을 해오던 김철준 변호사도 12일부터 단식 중이다. 이날 레미콘노조는 오는 19일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이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까지 인정한 노조를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는 처벌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치주의를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사업주들이 처벌되

지 않는 것은 자본가와 정권의 불법 커넥션을 증명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를 규탄했다. 또 레미콘노조 박정기 상황실장은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싸움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정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국을 순회하며 레미콘노조의 요구를 알렸던 자전거 전국순회단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다. 순회단원 30여 명은 지난 9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반대식을 갖고 2개조로 나뉘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해 이날 서울로 도착한 것. 검게 그을린 얼굴에 답수룩히 자란 수염과 탄에 찌들어 이미 빛이 바랜 흰색 티셔츠는 이들의 행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내달린 거리만도 6백50킬로미터. 이는 레미콘노조의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야기한다.

자전거 전국순회에 동참했던 유진

광주 분회 임영훈 조합원은 "충주에서는 음료를 사 주기 위해 우리를 가게로 끌고 들어가는 분도 있었다"며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표했다. 임 조합원은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샌달도 제대로 못 신게 하고, 올해만도 50시간 넘게 계속 일한 게 2번이나 된다"며,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를 원망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하지만 내가 1년만 꼭 참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범용)

<제현철 휴무로 7월 18일자 쉽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 때 : 7월 18일(수) 오후 3시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2층 강당
- 문의 : 강은경 (051-802-3438)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지난 15일 정오경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단식투쟁중이던 김철준 변호사의 농성장이 기습철거 됐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전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 2면에 계속)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 ◆ 때 : 7월 19일(목) 11시 / ◆ 곳 :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주요내용
 -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쟁 및 '인권협' 건설 경과보고
 - △인권현안 보고
 - (1) 최근 인권상황 종합
 - (2) 용역과제, 구사대, 공권력의 폭력성 그리고 민주노총 탄압에 대하여
- ◆ 발족선언문 채택
- △문의 : 송원찬 (031-213-2105)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보안관찰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와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가치중립이고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등의 신상명세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폐쇄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보안관찰 관련예산이나 운영지침 등 그동안 법무부가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던 것이 사실은 공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 판결에 의한다 해도 보안관찰은 논란이 될텐데, 법무부의 행정처분만으로 사생활 침해·인권 침해를 하게 만드는 보안관찰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보안관찰심의위, 보안관찰 동태보고서 등에 관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2심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보안관찰법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보안관찰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판결이 난 것은, 지난해 9월·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본보 2000년 9월 30일, 10월 21일자 참조).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 다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안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태섭)

(→ 1면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을 적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가 올 때 철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범용)

< 오늘 인권의야기는 필자 사정으로 쉽니다 >

주간인권호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1. '부평 경찰광채 두목', 3개월 간 쉬다 다시 부활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통해 불법한 공권력에 불복종 촉구(7.9) / 경주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롱(7.10) / 직위해제 전 인천지방경찰청과 전 부평경찰서장 3개월만에 대기발령(7.16)

2. 부당노동행위? 그게 뭐야, 우리는 그런 것 몰라!
노동부, "올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속자 4명"(7.10) / 민주노총, "올 들어 164명 구속, 70여명 수배"(7.10) / 레미콘 노조 고문변호사, '달리 방법이 없다'며 레미콘노조 인정요구 단식농성 시작(7.12) / 광주지검, 파견근로법 위반혐의로 대우 캐리어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청구(7.12)

3.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로 집결한다
273개 시민사회단체, 노동탄압 중단하고 개혁지속 촉구(7.11)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2일 조합원 대규모 상경투쟁, 반정부투쟁 확대 결의"(7.13)

4. 과거청산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뚤어진 생각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 "민주화관련자 보상금 상한 설정, 최고 1억 원" 법률개정안 발표(7.10) / 한나라당 등, "한국전쟁 유공자에 비해 너무 많다"(7.15) / 민주화국민연대, "민주화보상금 최고상한 설정 등 잘못"(7.16)

5. 현직공무원에 수배령 떨어지다
전공권 차봉천 위원장 등 4명에 검거령(7.9) / 전공권 차 위원장, 검거령 뚫고 명동성당에서 회견(7.11) / 수배된 인천, 부산, 경남에서도 공무원노조 요구하며 성당농성(7.11) / 전공권, 중앙위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예비지도부 마련(7.12) / 공무원노조 공대위·전공권,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시작(7.13)

6. 일본 교과서, 공공연히 침략을 노략하다
일본군위안부 출신 황옥임 할머니 장례식(7.10) / 정부, 유네스코에 일본 교과서 분쟁 조사 요청하기로(7.11) / 장쩌민 중국 주석,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역사는 인위적으로 못 바꾼다"(7.10) / 일본총리, 신사 참배와 관련 "이미 사형 받은 사람까지 구분해야 하는가?"(7.11) / 중국 <인민일보>, "731부대 말고도 산동성 지난해에서 1875 부대도 생체실험했다"(7.12)

7. 기타
경찰, 황선 범청학련 대변인 이적단체 적용 철폐(7.8) / 유엔 소형무기 근절회의, 10년 동안 피해 4백만 명 중 90%가 민간인(7.9) / 일본 중의원, 미군 성폭행과 관련 미일주둔군지위협정 개정요구 결의안 채택(7.9) / 수원지법 평택지원,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면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키 위자료 지급 판결(7.11) /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값 인하" 요구 시위(7.13) / 서울지검 회원정보 돈 받고 팔아 넘긴 신용카드 3사 적발(7.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19일(목)

제 18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혹한기 노천단식, 민주당사 점거, 무수한 집회와 성명 등, 올바른 국가인권위 설치를 위해 3년여간 싸워왔던 인권단체들이 다시 연대투쟁에 나선다. 다산인권센터, 외노협 등 33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가칭)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 협의회 (아래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가 법 공포 직후 스스로 해산한 것도 국가인권위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고,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청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 연대기구 준비위원장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소장은 "비록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를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절박성 때문에 연대기구를 건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기구는 국가인권위 구성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우선 19일 창립대회에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을 적극 견제하고 자체적으로는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국순회교육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힘을 계획이다.

인권위원 인선기준 제시

특히 연대기구는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 및 대응에도 힘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창립대회에서는 청송교도소 박영두 씨 사망과 관련된 고문교도관을 해임하고 징계하라는 '긴급결의안'과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대한 정부의 인선작업을 공개하라는 '촉구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립대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규약체택과 상임공동대표단 및 집행위원장 인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다. 한편 송원찬 소장은 "연대기구가 국가인권위 대응 수준을 넘어 인권의 향상과 그 지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 공동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범용)

(가칭)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 때 : 7월 19일(목) 11시 / ◆ 곳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반면,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규정은 유명무실화된다. 기존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야간·휴일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얻어 임산부에게도 야간·휴일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 탄광과 같은 유해·위험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을 금지하던 조항도 사실상 삭제했다.

법안이 통과된 18일 오전, 민주노총·파견철폐공대위·지역노조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60여 명은 한나라당 앞에서 '여성 근기법 개악안 통과 저지대회'를 열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규정 축소와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 제한 축소 조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심재욱 여성국장은 "여성노동자 가운데 80%정도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가사·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야간노동을 규제해도 부족한 판에 야간·휴일 연장근로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장시간 노동 문제는 비단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앞으로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심태섭)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약칭 WCAR)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 민간단체 간담회가 18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 파스 로마나(Pax Romana)의 이성훈 사무국장이 참석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경과와 주요 현안·의제 등을 소개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1978년과 83년 두 차례 열린 바 있다(본지 7월 12일자 참조). 두 번에 걸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남아공외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 남아공외에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전에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종교간의 불관용', '외국인 혐오',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폭력·부당해고·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한국통신계약직 등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벌이다 오히려 폭력·부당해고·구속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철폐공대위가 제작·배포한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기업·재벌기업·외자기업·공기업·민영화기업·건설업 등 각 사업장에서 계약직, 특수고용, 위장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운송노조는 하루 12시간 노동에 한달 2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법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합원 9명이 오히려 구속됐고 사측과 대화 한번 가지 못한 채 19일 현재 파업 101일째를 맞고 있다. 또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지난해 말 7천여 명이 해고된 후 219일째 파업 중이며, 파업 노동자 중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구속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월 60만원 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다 합법파업에 들어간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용역강제와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고 7명이 구속됐으며, 이른바 '캐리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와 대한송유관공사노조 등은 위장도급 아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방송사 비정규노조 역시 방송사측의 대화 거부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비정규직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며 폭력을 일삼는 사용자들에 대한 구속처벌이야말로 사태해결의 전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경쟁자들은 단 한 사람도 구속 처벌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만 탄압이 집중되고 있다"고 고발한다.

한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가 구성됐다. 공대위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처벌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범용)

은 것들이 '인종차별'의 영역과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년 만에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이런 다양한 쟁점과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올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질 현안은 크게 4가지로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서구·일본 등의 과거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배상·보상 △브룬디, 르완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족갈등 문제 △법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 문제 등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국은 ▲형태·원인 ▲희생자 ▲예방·교육·보호 조치 ▲구제방법 ▲국제협력 행동전략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민간단체, '이주노동' 문제제기

그러나 각 정부들은 널려있는 인종차별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과거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쟁점은 각국 정부들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 간에 '가해국 대 피해국'이라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국'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애써 현안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과거 식민주의 청산 문제 못지 않게 빈국·부국 사이에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클뿐더러,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에 있어서 '가해국'의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간담회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갖는 위상에 공감하며 민간단체가 담당할 몫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민간단체들은 특히 아시아권 민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 이주노동자·난민 문제를 쟁점화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심대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0일(금)

제 18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박영두폭행 가담·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약칭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 2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박영두를 타살한 교도관들 중 김의식·김명겸 등 2명이 아직도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청송제2교도소에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범무부가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17년 동안이나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한 84년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 대구지검 의성지청 최복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법무부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 등이 현재 알고 있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청송감호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들의 사죄와 징계를 요구한다. (심대섭)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 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인권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창립한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을 가진 함량미달의 법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인권피해자들에게 감히 ‘국가인권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감심장이 우리에게 없는 까닭”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연대회의는 “인권의식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나갈 인권위원 선임이 국가인권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인권위법에 뚫린 구멍을 메워줄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창립대회 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김광수 공동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일용 공동대표 등 7명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재소자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없다”

대전교도소에서는 매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재소자만 7,80명에 이른다. 청송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모 씨는 대표적인 예다. 박 씨는 지난해 향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해 의무과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과 의무과장은 “치질”이라고 일축했고, 몇 달간의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야 외부병원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부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공중보건으로 교도소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모 씨는 “형집행정지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도소에서 죽을 경우 책임추궁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털어놨다.

교도관이 약을 짓고, 소화불량이면 감기든 매년 똑같은 봉황색 약만 주는 곳. 의료가기는 80년대 것들이 태반이고, 부도내고 들어온 의사가 아침에는 의무실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감방으로 퇴근해도 감지덕지 해야하는 곳. 2001년 한국교도소의 의료현실이다.

병을 키우는 교도소

두 차례의 감옥살이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김 모씨(31).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그의 사건은 9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그는 같은 방 재소자에게 맞아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쳤다. 곧 교도관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도관은 이들이 지난 뒤에서야 의무관에게 보였고, 얼마 후 외부병원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병원에선 그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교도관에게 누차 물어봤지만 “괜찮다”고만 했다. 그는 어떤 치료나 약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는 출소 후 찾아간 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및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처럼 교도소 의료문제로 피해를 본 사례는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도소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들은 다섯 달째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재소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

재소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 의료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 의료문제와 관련, 재소자의 안녕을 위해 충분한 일반 의사의 배치와 검진, 치료는 물론 정신과 의사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치료이외에 시설의 위생상태와 난방, 배식, 운동 등 재소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 및 조언을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은 고작해야 재소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전염병 예방을 의무화할 뿐이다. 그나마 1년에 2회 명문화된 정기검진은 받았다는 사람도 드문데다 받았다고도 ‘검진’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정기검진의 항목은 학교 때 신체검사 항목의 복사판이어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청력, 언어, 혈압 등을 체크하는 정도고, 질병의 유무를 검진해야한다는 항목은 문답과 이상한 결론으로 끝이 난다.

“어디 아프나?” “특별히 아픈지 모르겠다” - 매우 정상. “소화가 잘 안되고 가끔 어지럽다” - “어디 보자. (청진기 한번 대 보고) 교도소 병이다. 나가면 낫는다” - 정상. 도저히 질병을 찾아내 치료할 수 없는 구조다. 정기검진과 관련해 일본의 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한 수형자의 질병 치료는 구금을 행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은 정기검진은 물론 암검진까지 명문화한 상태다.

의사 1명이 1천2백명 담당

의료예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용자는 6만8천여 명에 이르는데 비해 의사 월급등을 포함한 1년 전체 의료비는 23억원(1인당 3만7천원), 의사는 58명에 불과하다. 즉 의사 1인당 수용자 1천2백명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경남의 한 교도소에 재직중인 의무관은 “나는 신이 아니며, 매일이 전쟁”이라고 잘라 말한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기엔 의료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당국의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관할책임이 아니라며 교정시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민이다”

일선교도소 역시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외부진료가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이 없다” “바깥 구경 나가려는 죄병이다”란 이유로 외부진료를 엄격히 통제한다. 설령 외부진료가 허가됐다고 신청자가 많아 3달 이상은 기다려야하니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현실에서 96년부터 교정시설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고자 유럽 12개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고심중인 재소자 건강프로그램(Health in Prisons Project)의 주장은 갓이 새겨들을 만하다.

“재소자들도 일반시민이다. 그들은 언젠가 이 사회로 돌아온다. 만약 그들이 아프고 질병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병과 그 해악은 가족과 사회에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된다. 재소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재소자와 우리사회 모두에게 분명 이로운 일이다.” (유해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1일(토)

제 19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유치장 확장실 시설 위헌”

현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현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일 김 모, 송 모 씨 등이 “유치장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이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요지에서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화장실의 이용강제행위가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라며,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간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 등은 이에 앞서 유치장에서 △직장에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문제 등을 들어 영등포경찰서장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현재 결정에 대해 김 씨는 “유치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요구라도 경찰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

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현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따라 유치장을 운용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번 결정은 수용시설의 한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이미 유치장 시설 개선 지침에 따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1984년 10월, 청송교도소 ‘엄중독거’ 특별7사동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박영두가 살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하고 밤새워 입을 맞췄다. 물론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복성도, 부검의 김00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박영두의 동료들이 교도관을 인질로 삼은 것마저 무마됐고,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우리는 ‘살인’과 ‘조직적 은폐’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절차에 따른 처리’를 되뇌며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김천지원에서 민원접수계장으로 일하는 김의식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여줬다.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김명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을 은폐한 전모를 밝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고 어떻게 진상이 은폐됐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의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중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가혹행위를 한 2관구주임 이장삼, 관구교사 박수호,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겸과 사건을 은폐하는 데 참가한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복성, 교도 소장 김명식, 보안과장 서장권, 의무과장 서근수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이번 주말에 열릴 G-8회담 장소인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시애틀, 프라하에 이은 대규모의 반 세계화 시위가 예상된다. 지난 15일 여성들의 행진으로 시작된 시위는 회담기간인 19일부터 3일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위에 대비해 이탈리아 정부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7일 제노아 등 4개 도시의 좌익단체를 급습했으며 제노아의 항구와 기차역 한 곳을 각각 봉쇄중이다. 또한, 이탈리아 군경은 1만 3천명의 군인, 경찰을 제노아에 배치했으며, 회담장 주변에 적색구역과 황색구역을 설치하여 출입증이 없는 시민의 회담장 근처 시내 중심가로의 진입을 봉쇄했다.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해 회담에 참석하기로 한 각국의 대표단과 기자단들은 시위대를 피해 엔터프라이즈호, 유러 비전호, 페리호 선상에 나누어 머무르기로 이미 결정했다.

시위대 측은 이 같은 봉쇄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700여 단체로 구성된 반세계화 단체의 모임인 '제노아 사회포럼'(Genoa Social Forum) 측은 이미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계획하고 있음을 천명했고, 지난 6월 12일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 스키타에게 면담을 신청,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노아 사회포럼 측은 시와 국경으로의 자유 통행 보장, G-8 의제에 관한 자유 토론 허가, 시민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를 요청했으며, 새롭게 확장된 황색구역(접근은 가능하나 시위의 기미를 보이면 감금 가능한 지역)은 이탈리아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평화행진으로 금지구역 압박, G-8 의제 대안토론

제노아 사회포럼 측은 시위계획은 접근이 통제된 적색구역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회담 첫날인 19일, 이민자들의 국제 행진은 모든 단체들이 참가하여 프린시페 광장부터 시타델 지역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일에는 비폭력 평화 불복종운동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회담장인 적색구역을 포위할 방침이다. 또 G-8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약 8-10km를 행진해 적색구역의 근처로 나아가갈 예정이다. 제노아 사회포럼은 이외에도 15일부터 22일 까지 공공 포럼을 개최하여 G-8의 의제의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반세계화 시위는 제노아 사회포럼 이외에도 많은 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마다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반세계화 시위에서는 국제적 협력, 제3세계 외채 탕감, 환경보호, 시민권과 노동권, 지속가능한 개발, AIDS 확산 방지 등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반세계화 시위의 핵심은 제노아 사회포럼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 13억 인구가 1달러이하의 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사회정의와, 국제적 연대 그리고 공정한 개발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박수영)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장애인야간학교, 서울DPI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이동권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하철도 문제지만 버스는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차별”이라며, “장애인의 70% 정도가 한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참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1대 개조비용이 5백만원”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쌓여나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6개 광역시 등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중형버스 1대와 소형승합차 1대씩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를 이유로 정부가 ‘우리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써먹을 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선심성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인의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모든 장애인의 문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동권연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로서 ‘장애인권 의증진법’을 개정·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가칭)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

이를 위해 이동권연대는 오는 23일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황제어 장애인 20여 명과 함께 시청 앞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곧바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범용)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1.<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유네스코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대사 없이 제작한 애니메이션(2만원)

2.『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한 책(8천원)

★우송료 추가, 문의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4일(화)

제 19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7월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 해가 머리꼭대기를 지나고 있는 시간인지라 머리카락 사이로 설새없이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김의식이를 데리고 나오든가,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든가. 집회도 아닌데 왜 길을 막아.” 경찰 60여 명이 박영영(56) 씨의 앞길을 막고 벌써 10여분이나 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84년 10월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 박영두의 만행이며, 김의식은 박영두를 죽임에 이르도록 폭행한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말이냐 되냐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사람을 때려죽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놈이 아직까지 공무원 짓을 하고 있으니... 너들은 지금 살인자를 보호하는 거야!” 박 씨 얼굴은 숨이 턱턱 막혀오는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박씨는 이날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활동가들과 울산·광주·대구 지역 열사정신계승사업단 활동가들과 함께 김천지원을 방문했다. 동생을 죽이고도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김의식을 만나보겠다’는 생각 하나로 경남 통영에서 달려왔다. 그러나 김천지원을 방문한 30여명은 범법입구조차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기동대 2개중대가 법원 앞 도로 4개 차선을 완전히 봉쇄하고, 1~2명씩 법원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법원이 요청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동대 지휘관이 사무적으로 반복하는 대꾸에 사람들은 짜증만 더해갔다. “아니 모르긴 뭘 모른단 말이오. 텔레비전도 못봤소?. 김의식이가 나와서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 못 봤소?” 정말 속 터질 노릇이었다.

휴가 간 가해자, 김의식·김명겸

2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박씨와 가족 한 명이 법원에 겨우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법원에 들어가 알아낸 사실이라곤 김의식이 20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뿐. 사람들은 화가 치밀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했다. “경찰 아저씨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오. 내 김의식을 만날 때까지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올테니 그리 아시오.” 박영영 씨의 말투는 비장했다.

“김천은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청송으로 갑시다.” 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이 입을 뗐다. 청송 제2교도소는 고 박영두를 폭행한 또 하나의 가해자 김명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6월 고 박영두가 ‘교도관에게 타살됐다’는 의문사건상규명위 발표 후 계승연대는 7월에 들어 법무부와 대구지법에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두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교도소와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답신은 더더욱 놀라웠다. “청송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영두가 교도관의 집단 폭행에 의해 사망한 ‘의혹’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첫 머리다. 의문사건상규명위에서 ‘타살’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법무부는 ‘의혹’이라고 바

라보고 있는 것이다. 오후 5시가 다 돼 청송 제2교도소. 쇠철문은 굳게 닫혀있고 경교 20여명과 교도관 40여명은 문 뒤에 삐죽이 모여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었다. 차라리 김천에서는 핑계라도 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청송에서는 모든 것이 ‘벽’ 그 자체였다. “애기 좀 해봅시다”, “김명겸이는 어디 갔요?” 쏟아지는 질문, 어느 하나에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뒤쪽에 서있는 교도관들은 ‘불청객’들이 신기했는지 자신들의 앞에 펼쳐진 광경을 구경하며 답소를 나누기도 했다.

답답함과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급기야 철문을 흔들다가 끝내는 넘어가기도 했다. 이때야야 교도관들이 유가족 대표와 대화를 시작했다. 돌아온 대답은 ‘김명겸이 휴가 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박영두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므로’ 당시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이들은 살인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청송교도소 직원사택을 돌며 김명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말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는 없죠.”

박영두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7월 20일, 고 박영두를 죽인 김의식과 김명겸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청송교도소와 대구지법법원이 ‘옛날 일이다, 당사자가 없다’며 애써 외면하려는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영두가 땅 속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17년이나 참으며 진실을 밝혀낸 일입니다. 영두 영전 앞에 그 사람들의 사과는 꼭 받아낼 겁니다.” (심태섭)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 6월 29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통보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킹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폭력 사실에 대한 뻔뻔한 부인으로부터 100인위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 운동사회 분열을 낳는다는 대의명분까지... 기득권을 위협받은 가부장성은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고 가해자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했다. 진보진영의 반성과 대응은 미려했다. 우리의 가부장성은 아직까지 가해자의 지위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있다. 100인위 활동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보수적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아무리 잘나 의 것이라도 오래 간다. 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폭력을 겪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운동사회의 '홍콩한' 선배·동기·후배들의 성폭력이었다. 한번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던 일은 그대로 깊은 상처가 되었고 망설임 끝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려 받았던 폭언이나 비아냥은 가시가 되어 박혔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커녕, 단 한번도 진심을 울리는 사과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하는 것일까.

진보네트워킹은 100인위 게시판이 개설된 인터넷 서비스의 운영자이자 스스로 진보진영의 일원으로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100인위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부터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여러 압력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우왕좌왕하며 논쟁하곤 했다. 피해자와 성폭력 지킴이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렵게 합의했음에도 100인위 회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배포하는 악의적 이용자를 밤새 쫓아다니다 지쳐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해왔던 것 같다. 결국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100인위 활동가들이 몸을 던져 싸운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 의식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 의식도 곱질할 때는 고통을 요구한다. 나 자신도 순전히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 위에서 배우고 있다. 그간 피해자의 실명 부분만 익명 처리한 채 놔두었던 박일문의 악의적 글을 완전히 삭제하며 또다시 반성을 한다.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나 차별적 발언들에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어렵게 깨닫는다.

진보네트워킹센터 활동가

주간인권호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1. 부서의 MD강행 작전명 '임전무퇴'

미 국방부, "5년간 20차례 미사일 요격시험" (7.16) / 중·러 우호친선협력조약, 미 MD계획 비판 (7.16) / 일어나가 외상 MD지지, "미국 결정하면 따라간다" (7.16) / 미 국방부, 2006년 내 스타워즈 시험 등 MD 연구확대 계획 (7.17) / 국제시민단체 해 비무장감폐인, G8정상회담에 앞서 MD반대 시위 (7.19) / 아세안, MD체제 재검토 요청 공동성명 채택 예정 (7.20) / 미 국무장관, MD 계획 설득 위해 아시아순방 시작 (7.21) / 미·러, MD와 핵감축 연계 합의 (7.22) / G8정상회담 폐막, MD논의조차 안 돼 (7.22)

2.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명동성당,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퇴거 요청 (7.18) / 5개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쟁취 요구 여의도 집회 (7.19) / 정부,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발표 (7.19) / 레미콘 노동자 50명 집단단식 시작 '유재필 회장을 구속하라' (7.19) / 레미콘 노조원 전원 단식 돌입 (7.20) /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 총력 상경투쟁, 시청 앞 광장까지 진출 (7.22)

3. 국가보안법 그대로, 폭행교도관도 그대로!!!

민주당 원내총무,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힘들 것" (7.17) / 33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7.19) / 민주화계승연대 등, 청송보호소 앞 박영두 타살교도관 규탄집회 (7.20) / 한총련, 경찰 출두요구서 불응 기자회견 (7.20)

4. 선자유주의 반대 물결, 이탈리아 제노아까지

아르헨티나 노동자 24시간 총파업, 임금·연금 13% 삭감 항의 (7.19) / G8 정상회담 vs 반세계화 시위,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원 1명 사망 (7.20-22) /

5.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대학생들은 너도나도 휴학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97년 0.283에서 2000년 0.320으로 상승 (7.19) / 한국노동연구원 등, 5월 실질임금 0.9% 감소 (7.20) / 교육인적자원부, 올1학기 대학생 3명 중 1명꼴 휴학 (7.22)

◎ 주요판결 ◎

김삼석 씨, 보안관찰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부분 승소 (7.13) / 중국인 위안부 8명, 도쿄지법에 손해배상 및 총리사죄 요구 (7.16) / 현재, 유치장 내 차폐없는 화장실 시설은 위헌 (7.19) / 현재, 1인1표 비례대표제 및 2천만원 기탁제도 위헌 (7.9) / 재미동포 송학삼, 국보법 위반 징역 2년6월, 집유 3년 (7.19) / 서울행정법원, 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 (7.19) / 서울지법, 피의사실 공표는 국가책임, 배상 판결 (7.20) / 대법원, '일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7.2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5일(수)

제 19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안티포스코, 저작권 골레 벋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2000년 4월부터 안티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에 채워진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지난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공현)는 지난해 6월 8일 안티포스코 운영자 이용근 씨 등이 "포항제철이 나쁘다"라는 외침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 측이 포스코 로고에 'x'표를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킹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온라인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되는 요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평했다.

포철, 저작권 들먹이며 노동탄압

안티포스코는 97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삼미 해고노동자들에 의해 지난해 3월초 만들어졌다. 애초 안티포스코에는 POSCO 앞에 ANTI를 붙이고, 로고에 붉은 색으로 'x'표를 뒀으며, 포항제철 홈페이지(www.posco.co.kr)에 올려진 회사사진을 복사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모습과 합성했다.

당시는 포항제철이 중노위와 고등법원의 원직복직 판결까지 무시하며, 3년 가까이 싸워온 삼미 해고노동자들

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던 상황. 이때 포항제철은 저작권과 인격권을 들먹이며 POSCO, 로고와 회사사진을 안티포스코에 사용하지 말라고 안티포스코 측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자신에 반대하는 표현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이자, 명백한 노동탄압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법 민사55단독(판사 이선희)은 정확히 2주 후에 포항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역전승

2000년 4월 17일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직후, 전세계 26개 회원 네트워크와 38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진보통신연합(APC)은 이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어 8개국 11개에 달하는 복제 사이트가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리처드 스톨만이 제작한 싸이트도 포함됐다.

이에 가처분결정을 내렸던 민사55단독 이선희 판사는 '잘 모르겠다'며 같은 해 7월 18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민사합의부로 이송했다. 민사합의부는 10월 27일 "이 사건은 가처분절차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라"고 본안소송으로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포항제철이나 안티포스코나 본안소송까지 가지 말고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해, 결국 지난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도안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

소하기에 이른 것.

저작권은 거대자본의 통제수단

당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이용근 씨는 "이번 사건은 회사 로고에 'x' 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과 인격권을 들이댄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항의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저작권법을 적용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이어 "이번 판결은 권력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거대자본의 시도를 막아냈다"고 환영을 표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기중 변호사는 "저작권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일단 표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했고, 삼미 해고노동자 송철원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초기 화면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법원 삼미해고노동자 선고

한편 96년 12월 16일 삼미특수강이 봉강과 강관 사업부를 포항제철로 팔아 넘기기로 하면서 시작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특별위원회 소속 182명의 조합원들은 '포철이 96년 삼미특수강 봉강과 강관사업부를 인수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97년부터 5년 가까이 고용승계요구를 해 왔다. 97년 중앙노동위에서 삼미특수강 노동자에게 복직판결을 내리자 포항제철 측은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내자 99년 1월 22일 서울고법도 고용승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승계불가' 입장을 고수한 포철이 대법원에 상고, 2년 6개월만에 확정판결 일자가 잡혔다. (범음)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재필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부터 10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건설운송노조)과 이와 연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전(前) 유진종합개발 유재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교협, 민변 등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민중고발대회’를 열어 “노조 인정, 레미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대검찰청에 유재필 씨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한 사람씩 자신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고발장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검찰이 1백50건에 달하는 건설운송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하면서도 건설운송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한 사람씩 따로따로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유재필은 노조의 거듭된 단체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파업 현장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주했다”며 “농성현장에 용역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와해시키려 하는 유재필을 처벌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25일 현재, 건설운송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수원 다산법률사무소 김철준 변호사가 광화문, 국회 앞 노상에서 16일, 14일째 단식농성중이다. 또 지난 20일부터는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50여명과 2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 가족·대학생들도 동조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건설운송노조는 파업 기간 동안 4명이 구속되고 70여명에게 소환

장이 발부된 상태고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은 25일 노동일보 주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공청회(레미콘 업계 노사문제를 중심으로)’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에 열 예정이다. 발제는 민변 김선수 변호사와 건설연맹 백석근 정책기획실장이 맡는다.

(심대섭)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총력 상경투쟁 후 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더욱 끈주선 갈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찰은 23일 저녁 울산 북산성당 앞에서 봉황구 울산효성 노조원에 이어 24일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을 체포했다. 또 ‘현대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 회원인 이용수, 김원필, 강성만 씨도 24일 체포됐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 등 ‘울산지역 현장조직 대표자회의’는 “울산 총력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지역 활동가들이 연이어 체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1.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유네스코,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대서없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2만원)

2.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한 책 (8천원)

☆우송료 추가됩니다 ☆ 문의 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체포한 것은 두 사업장이 투쟁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현장조직 대표자 회의’ 등은 25일 오후 5시 울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체포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6월 이후 32명이 효성파업 및 화성 구조조정 반대 파업과 관련해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총력상경투쟁 이후 ‘도심 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대화로, 서울역,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11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보선]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까지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서문)

주요내용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보고서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6·15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 규정 /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 가격 : 8천원 (우편주문시 우편료 별도) / · 문의 : 이창조(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6일(목)

제 19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이탈리아 대사관 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벌어졌던 반세계화 시위가 서울 한남동으로 이어졌다. 25일 오후 2시 이탈리아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한남동에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이탈리아 정부의 살인진압을 규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탈리아 경찰당국은 지난 20-22일 제노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강경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0일 이탈리아 출신 청년 카를로스 줄리아니(Carlo Giuliani)에게 총을 발포해 죽였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picis.jinbo.net)에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당시의 정황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경찰이 후퇴하자 시위대는 경찰을 쫓아갔고, 한 시위자가 경찰차에 근접하자, 차 안에 있던 경찰이 소총을 꺼내 여러 번 쏘았다... 몇 번 쏘는지도 모르겠다... 3-4번...”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약 30cm 정도 흐르고 있었다.” “내가 있었던 곳에서 보기에, (경찰이) 너무나 가까이서 있었고 죽이기 위해 쏜 것 같다.” 한편, 카를로스 이외에 프랑스인이 이탈리아 국경부근에서 죽었고, 또 다른 한 명이 죽은 것 같다는 보고가 전해진다.

집회는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참가했던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의 규탄발언으로 시작됐다. 류 씨는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였던 ‘제3세계 외채탕감 문제’에 대해 “서방선진국들은 ‘외

채를 덜어줄테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라’고 요구했다”며 외채탕감의 기만성을 폭로했다. 또 류 씨는 “전세계 에이즈 환자의 95%가 아프리

카 지역의 민중들”인데, “정상회담에서는 이들에 대한 치료보다는 에이즈가 선진국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핵·화학·통신 분야의 군병력 1천5백명, 제노아 근처 해안 경비병력 8백명,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공중 공격 대비병력 4백명, 경찰병력 2만명의 배치 그리고 길이 9km, 높이 4m의 콘크리트 방벽을 친 통행금지 적색구역 설치” 등 “전쟁을 방불케 (= 2면에 계속됩니다)

<인터뷰>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

류 씨는 우리나라 사회단체 활동가로는 유일하게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참가한 배경은?

= 국민행동은 제3세계 외채탕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쥬빌리 싸우스’라는 국제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그런데 쥬빌리 싸우스가 이번에 외채탕감 문제를 의제로 제기한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참가하게 됐다.

◎ G8 정상회담 반대시위는 어떻게 벌어졌는가?

= G8 정상회담 행사장 주변은 높다란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녔고, 헌병대 군인들이 골목 곳곳을 지키고 있었다. 시위대들은 약 15만명 정도가 모였는데,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20일에는 행사장 주위를 에워싸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난사하고, 토끼몰이식 진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청년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 같다.

◎ 총기살인 사건에 대한 반응들은 어땠는가?

= 시위대들은 이탈리아 청년의 사망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다. 어쨌든 사망한 청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21일 오후 2시부터 검은 띠를 팔아 두르고 평화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시 시위대들 뒤쪽에서 강경진압을 시도했으며, 시위대들의 숙소는 경찰에 의해 난장판이 됐다. 한편 이탈리아 언론들은 사망한 청년이 무정부주의자이고 가출한 경험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경력이 있다는 등등의 사실만을 보도했으며, G8 정상들은 비극적인 일이라고만 언급한 뒤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 이번 반세계화 시위에 참가한 소감은?

= 지금까지의 반세계화 시위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선진국 정상들과 초국적 자본에게 확실하게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사상적 기반이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투쟁들이 명확한 기초와 전략,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전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소설가 박일문 씨가 지난 3월 100인 위원회 성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월 29일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진보네트워에 공개한 게시물에 나온 성폭력 피해자, 진보네트워크 000 씨에 대해 '혐의 없음', 100인위 성원 김00, 이를 보도한 <여성신문> 최00 기자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청 김태훈 검사는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발표한 게시물은 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소인 박 씨를 비롯한 16명의 명단 및 성폭력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공론화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검찰은 "자신(박 씨)이 준강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박 씨에 대한 공소장 등에 비춰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신문> 2000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성폭력 가해자 16명의 명단과 그 사례를 공개한 최00 기자에 대해서도 "기사 게재의 주요한 동기가 운동사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여 성폭력을 추방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인위 성원 김00, <여성신문> 최00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처분했다.

검찰은 또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100

인위원회가 박 씨에 의한 피해자라고 밝힌 000, 진보네트워크 000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해 100인위원회 장인태 씨는 "일반인이건 운동사회 일원이건 성폭력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고 밝히고, "이런 사실은 운동사회 내에서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장인 씨는 또 "성폭력 문제를 개인문제에 한정시키지 말고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아울러 이를 몰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설가 박일문 씨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함에 따라, 검찰구 전 KBS 노조부위원장이 제기한 민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100인 위 등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했다. 또 지난 3월 20일 <미디어 오늘>, <기자협회보>

등을 상대로 손해소송을 제기했으며,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이트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도 계류중이다. 강철구 공대위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뒤에 서버를 해외로 옮겨 운영중이다. (<http://www.antikcg.c2o.org>) (심보선)

(☞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하는 주장 상태가 죽음과 폭력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탈리아 당국은 이번 G8 정상회담에서 빚어진 살인만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끝난 후 국민행동 이종희 사무처장 등은 카를로스 트레짜(Carlo Trezza)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직접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건없는 외채탕감'과 '에이즈 치료를 위한 기금조성 및 특허문제 해결'이 민중들의 요구임을 설명했다. 이에 이탈리아 대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기약없는 인내를 요구했고, "이탈리아 청년이 사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정부도 이미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사무처장은 "대사의 답변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했다는 것으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형식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평했다. [범용]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보고회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한국상황에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준비됐다.

- ◇ 일 시 : 2001년 8월 2일 (목) 낮 2시
- ◇ 장 소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2번 출구, 기독교회관 뒷편)
- ◇ 사회자 : 조호제 교수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 ◇ 보고자 : 한홍구 (성공회대, 한국참관단장)
- ◇ 문 의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02-851-9086/017-311-424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7일(금)

제 19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을 거듭 해산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경, 서울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농성 중이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소속 활동가 40여명을 경찰 3백여 명을 동원해 연행하고 농성물품을 모두 압수했다. 연행된 박경석 공동대표, 노들장애이인

학 학생,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학생들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 가운데에는 장애인이 8명이며, 이 중엔 시각장애인도 1명 포함돼있다. 이들은 노량진·동대문·성북경찰서 등으로 분산 유치됐다. 27일 새벽 1시15분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노들야학 교사 등 10명, 성북경찰서에서 9명, 남대문경찰서에서 박경석 공동대표 등 10명이 풀려났다. 성북경찰서에서도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이동의증진법' 개정·

강화 △정부·장애인단체 간 협의체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며 줄곧 농성을 해왔지만 경찰이 천막을 못 치게 해 지극껏 노숙을 해왔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비와 이슬을 맞아가면서 바닥에 깔 듯 자리 하나에만 의지하며 농성과 대시민 홍보활동·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농성 첫날인 23일엔 경찰이 천막 설치를 막는 도중에 천막이 부서지고, 이를 막으려던 에바다대학생연대 소속 배원영(건양대학교 2년) 씨가 정신을 잃고 인근 강북성심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일몰이후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을 진압, 26일까지 천막 3개를 파손시켰다.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였나?

26일 연행현장을 목격한 노들장애이인 야학 김기룡 교사는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확보해 담당하는 '사회적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달에 교차 다섯 번 정도 외출, 사실상 감옥에서 사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이 사회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현행 집시법을 위반하며 노숙농성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사는 또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장애까지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이 제대로 서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라며, "이런 절박한 요구에 방패와 군화발로 짓밟고 연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심대섭·심보선)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들먹이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도까지 계승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계심만은 대단한 것 같다. 효과는 담보할 수 없어 도 말이다.

"... 나라도 갈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현실... 이곳 교도소에서 10년을 살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나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은 고작 100만원이 될까말까합니다..." 한 재소자의 편지다. "평생 소매치기로 살다가 감호까지 받아서 10여 년 만에 나갔다가 오죽하면 갈 쓰고 다시 들어오겠나?"는 출소자의 지적은 행형과 형사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은 입소전보다 더 범죄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참여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

지난해 법무부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하루 7, 8시간의 노동에 대한 댓가로 최하 5백원에서 4천원 정도 참여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제조·양재·인쇄 등의 노동에 종사하지만 대부분 일당 1천 원 안팎의 참여금을 받는다.

더구나 교도소에서 식사나 청소업무(관용부)를 주로 하는 재소자들의 경우 1일 참여금이 최하액수인 5백원이자. 법무부 관계자는 "식당, 청소 등은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며 "참여금은 임금이나 정부 시혜적 조치로 인식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99년 약 2백70억원의 작업수입 중 참여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약 54억원으로 총 25%라고 말한다. 재소자 일인당 연평균 2십만 9천 원, 한달에 2만원도 안 되는 액수를

지급 받는 것이다. 국가가 예산을 세워 운영해야 할 교도소살림을 재소자 노동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되려 시혜라는 이름으로 생색까지 내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들이 일하다가 다친다면? 잔반을 거두다가 손가락이 잘라낸 장아무개 씨는 외부병원에 나가 수술을 받고 1주일의 입원치료를 권고 받았다. 소측은 통원치료를 약속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손가락 장애를 갖게 됐다. 작업참여 여부가 가석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요구하다가 교도소와 관계가 악화 돼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용지물 자격증, 법무부에 반납도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양재·목공·자동차정비 등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직업훈련을 선호하지만 대상자 선정은 교도소 마음대로나 마찬가지다. 훈련 시간, 내용도 느슨하고 자격증시험은 부정이 비일비재하다. 오랜 수형생활 동안 수형자들이 딴 3, 4개의 자격증은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기 쉽다. 최근 출소한 오아무개 씨는 "자격증 갖고서 취직해도 막상 일을 해보면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금방 탄로 난다"며 쓴웃음을 삼킨다. 99년 한 청송 출소자가 무용지물이 된 자신의 자격증반납을 법무부에 청원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전체수감자의 4%인 판인 여성재소자들은 대부분 직원식당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조차 보장받기 힘들다. 학교교육 역시 비슷한 실정이며, 오후 8시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강제취침은 원해도 더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외에 교정교화를 위한 정신교육은 반공교육일색이며 수형자들의 독서와 신문구독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체수형자의 반 이상이 참가한 단식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이들이 요구한 수형자조직(조합)의 합법화, 임금인상, 접견과 귀휴(일종의 휴가) 확대, 도서관 개선, 비인간적 감시 축소 등을 사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비슷한 상황을 맞은 주변국들 역시 감옥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 즉 감옥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수형자들은 작업이나 교육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경기불황이나 병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수형자에게 실업수당을,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용돈을 지급한다. 물론 작업하는 재소자의 경우 1년 기준으로 18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이들이 산재보험 대상자임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적 시혜가 아니라 재소자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돌려주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임감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다.

단순구금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내 작업이나 직업훈련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많은 이유는 '무료한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된 일을 찾기 위해서'이다. 일찍이 '범죄학교, 무료한 일과, 가족 등 인간관계 해체, 일상적 감시로 인한 정신병 발병 및 인간성 파괴' 등으로 비판받아 온 감옥형벌만큼 우리사회의 모순을 극악하게 드러내는 제도도 흔치않다. 북유럽의 진보적 학자들은 감옥폐지를 주장하며 범죄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은 최소한 각국의 교정국이 적극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하며, 그 일환으로 사회내 처우(구금이 아닌)를 실험·도입하도록 권하고 있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28일(토)

제 19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대법원이 지난 99년부터 2년 넘게 미뤄왔던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괄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포철의 부당해고였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2천 3백42명중 아직까지 재고용이 안 된 182명의 복직은 더욱 어렵게 됐다.

삼미특수강은 지난 4년 동안 인수방식문제를 놓고 '자산매매 방식이냐, 영업양도 방식이냐'를 다투는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자산매매 방식을 빈 영업양도'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영업양수·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미인수방식은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없는) 자산매매 방식이었다"고 판단했다.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신인수의 편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

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 자본의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을 권 사람이나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은 자본과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에게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위법적 간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압력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안업무의 '총사령관'인 대검공안부장의 '간여'가 그저 '덕담'이나 '충고'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불법적 개입은 있었는데 파업유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말장난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지 재판부에 물고싶다. 나아가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던 진씨의 고백마저도 '취중발언'으로 이해해 준 재판부의 판단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찰과 공안합수부의 의도대로 실제 파업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진실은 우리 앞에 똑똑히 살아 있다. 구속되고 유죄선고를 받은 노동자도 있었고, 심지어 분신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법원이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가슴에 내리꽂은 비수는 더욱 잔인하다. 97년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로 인수된 이후 자그마치 1685일. 창원과 서울을 오르내린 해고자들의 행군은 중국의 대장정을 방불케 하고, 낙달여의 노숙 투쟁과 집단 단식, 시위와 구속의 악순환, 심지어 가족해체와 비관자살에 이르기까지 해고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문 속에 '자산양도니 영업양도니' 하는 자본의 논리만 춤추고 있을 뿐, 어떠한 '인간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법이란 다 그런 것 아니냐"고 체념하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의 주인으로 설날이 올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이 문구를 온전히 구현할 책임을 저들로부터 거둬들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이다.

시너로 전라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이름을 빌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이라고 규탄했다. (→ 2면에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인도네시아 최동단 서파푸아(WEST PAPUA, 인도네시아 명 이리안 자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기니아섬 서쪽에 있는 인구 200만의 서파푸아는 수 백년 동안의 식민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를 지녔지만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5세기 초엽 서구 무역상과 선교사들을 통해 알려진 서파푸아는 그 후 약 350년 간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1962년 인도네시아 침략에 이어 1968년 유엔의 병합승인 후 서파푸아는 인도네시아의 한 주로 편입됐다. 수하르토 사후 인도네시아는 서파푸아의 자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동시에 수 천명의 군대를 증강 배치시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아베푸라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2000년 12월 7일 서파푸아의 수도 자야푸라 근처 대학도시인 아베푸라에서 두 명의 경찰과 한 명의 경비원이 살해되었다.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을 이 지역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파푸안 고지(Orang Pegunungan Tengah)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보복을 시작했다.

경찰은 대학 기숙사를 한 밤에 급습하는 한편, 다른 지역 고지 독립운동단체 대원들을 검거한 후 고문하고 구타했다. 그 결과 한 명의 학생이 총상으로 죽고, 두 명은 구타에 의해 사망했으며, 십 여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인 지난 1월9일 아베푸라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고,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조사 초기부터 경찰과 관계당국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인권정의부(Justice and human Rights Ministry)는 공문을 보내 위원회의 조사는 불법이며 지방경찰서장은 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갖은 노력 끝에 조사시한을 한 달 연장시킨 위원회는 결국 피해자 51명과 경찰 39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4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아베푸라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세계 여러 인권단체들은 아베푸라 사건을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에서 다루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으며, 인도네시아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7월 중순까지 심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0년 11월 개정된 법규에 따라 현재 마카사르에 신설중인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기까지는 재판관 지명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아베푸라 사건의 의의는 이 사건이 신설된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직면할 최초의 사건이라는 데 있다. 이 사건 심리를 통해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을 재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부와 경찰의 불법행위와 살인에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보고회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한국상황에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준비됐다.

- ◇ 일 시 : 2001년 8월 2일 (목) 낮 2시
- ◇ 장 소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지하철 1호선 중로 5가역 2번 출구, 기독교회관 뒷편)
- ◇ 사회자 : 조효제 교수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 ◇ 보고자 : 한홍구 (성공회대, 한국참관단장)
- ◇ 문 의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02-851-9086/017-311-4245)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1.<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유네스코,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대서 없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2만원)

2.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한 책 (8천원) ☆우송료 추가됩니다 ☆ 문의 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반대하는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수영)

(=> 1면에서 계속됨)

민주노총은 또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실제로는 영업양도인데도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매 형식을 빌어 인수한 것"이라며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7월 31일(화)

제 19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연합단체 구성 논의'가 공무원노조결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차봉천 위원장 등에 대한 검거령을 풀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전공련 등이 지난 28일 부산에서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전공련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이 대회 주동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정부는 한편으로 '공무원노조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를 주장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노사관계소위를 열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의장 이철수)'를 구성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분과회의를 열었다. 노사관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는 총 10개. 이 중 분과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김성훈 전문위원은 "전공련 등과 행자부의 의견을 듣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집중토론하기 위해

분과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10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됐다고 공무원노조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 노사정위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권한이 없음을 인정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는 노사정위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담당 계장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공무원노조 자체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부산 결의대회 주동자를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대응은 단호했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노사정위에서만 논의하고, 공무원노조가 도입될 때까지는 전공련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인 셈.

전공련 박재범 사무처장은 "행정자치부가 전공련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10월까지 분과위의 논의 일정을 잡은 것은 사실상 올해 공무원노조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사정위를 통한 시간끌기 작전을 비판했다. 내년 월드컵, 총선 등의 일정을 보았을 때 올해 반드시 공무원노조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공련의 입장.

박 사무처장은 "어쨌든 정부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가 검토돼야 한

다고 인정한 점은 전공련이 벌여온 투쟁의 성과"라고 평했다. 그러나 특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명확히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공련 노명우 노조추진기획단장은 "8월 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28일 공무원결의대회 주동자를 처벌하는 등 전공련을 계속 탄압할 경우 법외노조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련은 3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 '제한적 연합단체 허용' 등에 대해 입장을 정한 뒤 오는 8월 2일 명동성당에서 차봉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범용)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

'장애인이동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가 30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벌인 천막농성이 '야간집회제한'이라는 집시법 조항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장소를 옮긴 것. '이동권연대'는 또 이날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30일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맨 처음 주자로 나섰다.

지난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장애인이동권 확보 노숙농성'을 한 '이동권연대'는 "서울시 등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서울역 광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심보선)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가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려,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되자 만들어진 노조이다.

새로 만들어진 발전노조는 전국 5개 지방본부, 37개 지부, 5,600여 조합원이 가입한 산별노조이다. 정부와 한전 경영 측이 5개 지역으로 발전사업을 독립법인화 했지만 노동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산별노조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경영측은 만약 어용측이 산별위원장으로 당선되면 협조의사가 있지만 민주파가 당선될 경우 사무실도 내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차이다. 이때 민주파관 한전노민추가 발전적으로 전환한 전련노조민주화투쟁연대(이하 전민투련)를 말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전민투련 소속 이호동 후보가 3,333표, 61.1%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5개 지방본부장 선거에서도 전민투련 소속으로 출마했던 3지역은 모두 1차에서 당선되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민주노조가 건설된 것이다.

전련노조는, 5·16 군사쿠데타를 배경으로 몇 개로 흩어져있던 전련회사가 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된 이래 민주노조다운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94년에는 어용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간부 13인에 대해 특별히 정년을 연장하는 등 조합간부와 사측이 파행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기도 했다. 96년에는 본부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어용집행부의 독단을 참다못한 김시자 열사가 분신을 감행하였다. 위원장의 무수한 직권조인으로 점철된 한전노조의 역사는 그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배신의 역사'였다.

이제 그 배신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이번에 당선된 후보진영이 단지, '민영화저지, 고용안정쟁취, 실질임금쟁취, 열사추모사업 및 해고자 복지,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 아니다. 8년여의 투쟁속에 소수자로 남으면서도 노조민주화에 대한 신념 하나로 조직을 유지해온 전민투련이 뒤에 있고, '밝히면 밝히는 대로 살았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마음과 마음을 모아 민주노조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전련 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단호히 맞서 투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직 구축해야 할 교두보가 더 있다. 하반기에 있을 도시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선거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된 철도와 발전노조는 이 두 선거에 자신들이 지원 받은 만큼 지원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이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 16일째 단식농성 김철준 변호사 입원(7.27) / '유재필구속을위한100인위원회', 1인 1일 릴레이 100인 단식농성 시작(7.27) / 레이콘 연합회, 각 사회단체에 "레이콘 근로자들이 조직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이라는 문서 발송(7.28) / 건설연맹 이용식 위원장 21일째 단식농성 끝에 병원입원(7.30)

2. 공무원연합은 좋은 데 노조는 죽어도 안 돼!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 김영길 회장 풀려나고, 부공편 이용한 의장 자진출두(7.25) / 정부 고위관계자, "연내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진 전국단위의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7.26) / 이태복 청와대 복지수석,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이 노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7.26)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 공무원직장협 개선, 공무원 노조 입법 등 검토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7.27) /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알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 씨 사건 직권조사 개시(7.24) /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 보고서에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조약' 가입권유 검토하겠다"-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7.26)

4.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 싫다-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장애인들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게" 100만인 서명운동 및 시청 앞 농성 시작(7.23) /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4대문안 천막농성 허용 못한다는 경찰 방침에 연행(7.23, 26) /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서울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계속(7.30)

5. 해외소식 엠네스티 '인종차별과 법집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 법 집행 과정에서 날마다 인종차별 있다"(7.25) / 미 언론, "60년대 인도네시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28)

6. 법원의 주요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판결(7.23)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진형구 발언은 '취중실언', 파업유도 무죄판결(7.27) / 대법원, "포천,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의무없다" 판결-4년반 복직투쟁 물거품(7.27)

7. 기타 검찰 마약수사관, 시민을 히로뽀 판매상으로 오인 집단 구타(7.27)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녹색연합, "전국 13곳 지뢰사고 위험"(7.26) / 대한항공, '징계 최소화' 합의문 불구 조종사 파업 주도 7명 파면결정(7.27)

인권하루소식

2001년 8월

(제1907호-제192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1일(수)

제 19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7월 30일 저녁 6시부터 동성에 싸이 트인 이반시티닷컴(ivancity.com)의 접속이 갑자기 차단됐다. 지난 5월 다음 커뮤니케이션 내 동성애자 카페 '81CLUB'과 세이클럽(sayclub.com) 내 동성애자 동호회 '조금만 사랑했다면'의 폐쇄조치에 이어, 정보통신윤리위가 또 다시 음란·불온이라는 테러를 가한 것이 분명했다. 이에 따라 엑스 존(exzone.com) 등 동성애자 사이트는 그 날 저녁 7시부터 72시간 공동과업에 돌입했다.

사이트 공동과업은 정보통신윤리위의 폐쇄조치에 항의해 홈페이지 게시 판에 항의글을 올리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등 지금까지의 대응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동성애자들 간의 연대 투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19개 동성애 관련 단체들

은 7월 31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아래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식을 갖고, 정보통신윤리위의 폐지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 변태성행위 취급 말라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보호위는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지향을 문제삼아 퇴폐와 음란의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 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

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명시한 것.

하나의 사안에 대해 19개나 되는 동성애 관련 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이날 발족식에서는 각계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와 동일시하고 혼음·근친상간 등과 같은 부류로 묶는 청소년보호법은 잘못"이라며, "동성애"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에게 더욱 절실

하지만 청소년보호위 서하봉 사무관은 "대다수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동성애는 아직까지 통상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동성애가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위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발언을 유도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이 동성애자 인권침해국"임을 알려나가고 이반씨닷컴의 폐쇄조치에 항의하는 사이트 공동과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용)

국가인권위 위원 공개추천 기자회견

◎'인권단체는 이런 인권위원을 원한다'

- ◇ 일시 : 8월1일(수) 오전 11시 / ◇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안국동)
- ◇ 내용 :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 공개 / 인권위원 인선작업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 발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 ◇ 일 시 : 8월 2일 (목) 낮 2시 / ◇ 장 소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 사 회 : 조효제(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
- ◇ 보 고 : 한홍구 (성공회대, 한국참관단장)
- ◇ 문 의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02-851-9086/017-311-4245)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도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로 다른 분석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상은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오랜 기간 파업을 하다가 생활고에 쫓겨 파업을 그만두는 조합원까지 생긴 한통계약지 노동조합이 체권을 발행, 투쟁기금 마련에 나섰다. 또 법외노조로 출발한 명월관 계약직 노조위원장 등이 계약을 해지당(5.25)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월관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유예'의 장벽을 넘어 반드시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집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우캐리어는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 파업을 깨고, 경찰까지 달려들어 한승록 조합원에게 못매를 가하기도 했다. 사내하청노조는 대우캐리어 정규직 노조의 방관속에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 73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7.18)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파견철폐공대위'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석한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2. 어떤 목소리도 듣기 싫다 - 집회참석 인원제한, 도심지 집회 제한 등 서울지검 공안2부가 언론을 통해 '집회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과의 협의도 했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다음 날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시내 집회가 열려 교통혼잡 등 많은 사회비용을 유발시켰다"며 "도심지 집회를 제한하겠다"(7.23)고 울려퍼졌다. 또 경주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택시유리문을 부수는 등 '시위파괴'를 연출하려다 '불행(?)'하게도 사진이 찍혔다. (7.7)

한편 단병호 위원장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불심검문을 하자 민주노총은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7.9)해 경찰의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분신자살'과 맞물려있는 강기훈의 '유서대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은 승승장구,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박영두가 교도관에 의해 타살됐으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어 고발은 물론 징계요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고 박영두의 유가족들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김의식, 김명겸이 현직에 있는 김천지원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이들의 반성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내가 피해자"라고 우겼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질의에 "대통령에 내는 최종보고서에서 공소시효 부적용조약 가입을 권고할 것을 검토하겠다(7.26)"고 밝혔다.

4. 지적재산권의 황포를 막아내자!

영원한 상역으로 여겨졌던 지적재산권이 현실에서 도전받고 있다. 인의렴 등은 백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글리벡' 약가인하(7.13~20)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지적재산권을 핑계삼아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독점행위를 부리고 있다는 것. 지적재산권이 민중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글리벡'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논평

-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7.7)
-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7.14)
-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7.21)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7.28)

인권이야기

-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7.3, 김혜란) / ·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7.10, 신윤동욱) / ·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7.24, 장여경) /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7.31/ 김혜란)

주요판결·처분

- 에바다 이사회정지처분 기각(7.10, 수원지법 평택지원) / ·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 · "유치장 화장실 시설위헌"(7.19, 헌법재판소) / · "포천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 ·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 ·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축진'(7.27, 대법원)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 ⑤인권교육! 무관심을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7.3)
- ⑥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7.4)
- ⑦(끝)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7.5)

기획-한국 감옥의 현실

- ①소내 가혹행위 -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7.6)
- ②재소자에게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7.13)
- ③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재소자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없다"(7.20)
- ④자업과 교육 -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7.27)

연대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창립(7.19)
-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창립(7.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일(목)

제 19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국가인권위원회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1일 광노련 방송대 교수 등 인권위원 10명을 공개추천했다(추천이유 2면).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여당 일각에서 진행중인 인권위원 선정 논의가 처음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돼 정치권, 국가기관, 기득권 세력의 '나뉘먹기'식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법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채 통과된 만큼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옹골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개추천 이유를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추천된 사람들이 실제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추천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인권위원 선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10명을 추천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도덕적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인권단체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함을 운영과정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보 완해 나갈 수 있는 감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지명도와 일정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을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7월 19일 창립대회 직후부터 공개추천에 관한 내부논의 시작

7월 24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공개추천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회부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 압도적 다수가 공개추천에 찬성.

- 20여명의 피추천후보 명단과 자료를 검토하며 3시간 동안 논의 한 끝에 구체적인 인선은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에 위임

- 인선기준 마련 (위 기사분문)

- 법조계 및 여성계에 훌륭한 사람 추천하기로 요청

7월 30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3시간 토론 끝에 20명의 후보 중 10명을 선정

8월 1일 대표자회의

- 인선 안 추진 및 기자회견

연대회의는 또 "인권단체로서 변호사 및 여성운동을 인선하는 데 따를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법조계와 여성운동계에서 인권위원을 적극 추천할 것을 제안"하고, 이들 단체에 인권위원 추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철준, 문재인 변호사는 그간의 활동을 고려해 인권활동가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예외적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원 임명·지명·선출권한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 추천명단을 통보하고, 청와대,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해 연대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인권위원 인선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비민주적인 밀실인선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인, 3인을 지명하고, 국회는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내정 발표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 1일 오후 "대통령이 김창국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장에 내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작업은 김 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인권 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 해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 약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 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나 집필·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법학자이다. 오랫동안 불교인 권위원회 공동대표, 한국 교회인권센터 실행이사, 국제 엠네 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현실 참여도 활발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현재 민족문제 연구소 소장이며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관한 많은 글을 쓴, 감직한 인사라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근수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90년대 이후 통일운동과 인 권옹호운동, 특히 양심수문제와 민중생존권문제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그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반공이데올로기에 찌든 한 국사회에서 그가 감행해온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은 운동 사회의 존경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돌파하고 선도해 나가는 활동력이 돋보인다는 평가 를 받았다.

문정현 신부 역시 90년대 이후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인 권옹호운동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천주교 사제라고 판단 된다. 그 또한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 고 있으며 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돌파하고 선도해 나가 는 활동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작 은자매의집' 원장으로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은 그 의 인권적 감수성이 남다른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의 인권옹호활동으로 널 리 존경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시국사건과 부 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맡고 정 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군사정권과 맞서 투쟁한 경 력도 만만치 않은 반면 현재 부산광역시와 관계를 맺고 전 개하는 공익활동도 활발하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부 산인권센터 공동대표 등 인권단체에의 참여도 돋보인다.

김철준 변호사는 수원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그 변호

사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90년대 수원의 거의 모든 인권사 건을 도맡아왔다. 치밀하고 부지런한 그의 성격으로 세 차 례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순심 김명희 씨 등 가정폭력사 건, 민병일 의문사 사건 등 수많은 억울한 인권사건에 성 실하게 대하였고 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시대의 '호민관'이어야 할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길승 원장은 오랜 민주화운동과 박해를 넘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원진레이온 지 업병 사건을 비롯하여 갖가지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에 앞장 서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사 및 고문사건에 헌신적으로 간 여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와 고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은 민가협 창립회원이며 민가협 16년의 역사에서 최다·최장기 회장 (상임의장)을 역임한 '양심수의 어머니'이다. 교도소 앞뿐 만 아니라 인권유린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사회의 인권유린을 꿰뚫어 보는 그의 지혜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건강상태 가 좋지 않고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 었으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데 선정자들의 의견 이 일치했다. 무엇보다도 귀한 여성 인권운동가라는 점에 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이금연 '안양전진상복지관' 관장은 노동자로서 그의 경력 을 시작했으며 근로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상담, 교육 등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 여성, 빈민, 이주노동자문제에 걸쳐 있다.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 교육 등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이 평가되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부회장과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반 차별과 복지활동을 펼쳐왔다. 역시 여성 인권운동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최민 '장애인의 꿈 너머' 이사장은 지체장애 1급인 장애 인으로서 현재 가장 활동적인 장애인 운동가로 꼽히며 장 애인의 인권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 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제현의회 그 룹' 등 창립에 참여한 대표적인 운동가였던 그는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 있는 감각을 지니는 인권운동가라는 점이 평가되었다. '올바른 국가인 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그 제정과정에 정통해 있는 점 이 그가 추천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3일(금)

제 19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 등,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 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 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 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 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 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 는 나라. 대체복무제의 실상을 직접 돌아본 참관단은 "대체복무제도가 다 양한 측면에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소방·사회복지·환경보호 등 각종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지 확대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청년들의 선택 권 부여 △현역 근무여건 개선 △양심 적 병역거부자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한홍구 성공 회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군대 내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체복무제 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병역 비리와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투옥 등 많은 문제들 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군 현대화 일환으로 도입

대만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과정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참관단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96년 치 엔시치에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와 여론 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이 주장은 97년 국방부가 군병력 감축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맞게 된다. 사회복지단체 등을 방문하며 대 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 했던 치엔 의원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등이 뒤따르면서 대만 정부는 대체복 무제 도입을 개혁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게 됐고, 결국 지난해 7월부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 다. 한 교수는 "대만은 변화하는 상황 에 대한 지배세력의 자기변신이 있었 다"며 "국민당(당시 집권당)과 군부 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수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라고 평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여호 와의 증인'만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보수적 기독교단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힌 반면, "대만의 기독교계는 '그 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 교수는 밝혔다.

'모병제 전환' 문제제기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병제로 의 전환'이라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제 기됐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왜 꼭 군에 가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더 이상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적 성격인 대 체복무제가 모병제 논의의 촉발제로 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홍구 교수 역시 "보편적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 를 위해 현행 징병제의 개선이 논의되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이동식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나나?”

“정말 콩밥을 먹나요?” 교도소란 곳을 떠올릴 때마다 일반인들은 흔히 콩밥을 연상한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교도소의 배식이 콩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실감나듯 교도소에서의 콩밥은 특식이 된 지 오래다. 주식은 쌀과 보리의 8:2 혼합으로 배식되고, 반찬도 매일 매일이 다르다. ‘재소자 주·부식 급여규칙’이 제정된 데 이어 98년부터는 밤마다 식탁·책상 겸용의 탁자가 비치돼 마룻바닥에 음식을 놓고 식사해야 하는 모멸감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재소자들이 식사시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흔들리는 이빨과 등성등성 빠져 있는 머리를 가리키며 영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재료 본 사람은 못 먹지!”

올 한해 행정당국이 책정한 재소자 1명의 1일 급식비는 2210원. 그러나 이는 주·부식 재료값에 연료비, 필요한 가재도구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 순수하게 먹는데 쓰여지는 돈은 약 1200원, 1끼 식사당 400원 정도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대량급식이라 해도 투자되는 비용이 턱없이 낮다보니 질 좋은 식사를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무리다.

단가를 맞추다보니 쌀은 창고에서 3-4년을 묶은 관수용이고, 부식재료들은 썩어서 못 먹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감독 교도관들이 2-3일마다 들어오는 부식재료 상태를 매번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두 겉눈질 한번에 통과된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검사절차에도 불구하고 10년에 3-4번씩은 퇴짜소동이 발생한다.

“상한 야채라도 요리해 놓으면 티가 나나? 요리해놓고 봐서 괜찮았다 싶은 배식나가는 거지...” 청송교도소에 수

감돼 있으면서 6개월 간 취장에서 일했다는 출소자 오모 씨는 “안 본 사람은 먹어도 재료 본 사람은 쉽게 먹히지 않는 게 교도소 음식”이라고 말한다.

부활절 계란 먹고 식중독

상태가 이렇다보니 집단 식중독은 매년 한두번씩 들리는 손님이다. 마산 교도소에선 지난해 봄 반찬으로 배식된 음식 때문에 달이 나 40여 명의 재소자가 식중독과 심한 설사증세를 경험했고, 청송감호소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써먹은 계란이 문제가 돼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각 소마다 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양사가 1명씩 배치돼 있긴 하지만 취장에서 일하면서 영양사를 보았다는 재소자는 없다. 배식 때마다 영양사가 음식을 갖고 올라가 의무과장과 보안과장 등의 결재를 맡은 후에야 배식이 가능하지만 어떤 음식이 올려지는지 모른다는 것이 재소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한 영양사가 작성하게 돼 있는 식단은 매번 변화가 없어 한번 작성된 식단표는 한달 후에 배식 요일만 바뀐 채 다시 식탁에 오른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호박된장국과 가자미조림이, 호박된장국과 고등어조림으로 변하는 정도다.

‘단백질 사냥’에 혈안

정말 많은 수의 재소자들이 단백질 부족을 호소하지만 고단백 요리가 메뉴로 오르는 일도 많지 않고 오른다 해도 닭조림과 김치돈육국 등에서 고기덩어리를 발견하기란 쉽다. 그렇다보니 많은 재소자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 2-3개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한편 음식물 구매에 열을 올린다.

현재 자비구매가 가능한 음식물은 과자, 사탕, 과일 등의 간식류와 멸치조림, 김 등의 부식을 포함한 26가지. 이 중에서 당연 인기 있는 품목은 최근 들어 구매가 가능해진 ‘훈제 닭’이다. 한 조각에 1700원이나 되는 최고가 식품이지만 재소자들은 부족한 영치금을 털어 ‘닭사냥’에 나선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예정공세에도 불구하고 구매물 역시 시중의 것과 비교하기 어렵다.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음식이 들어오거나 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있는 음식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지지난해 경주교도소에서는 유통기간이 1년이나 넘는 김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재소자들이 배식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곰팡이가 핀 빵 때문에 교도소가 들쭉거렸다.

“질 좋은 음식은 호사”

이렇듯 질 나쁜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교정시설 쪽에서 질보다는 무조건 싼 것을 택하는 “자기일צל”을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구매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측은 “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낮은 단가로 물품을 제공하는가’다. 여기에 물품의 질까지 요구하는 건 호사”라고 잘라 말한다. 재소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할 때 무조건 싼값에 구매품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유럽국가들이 피규급자를 채우하는 원칙으로 정한 ‘유럽규칙’은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다. 유럽원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규급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4일(토)

제 19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새로운 검열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 7월 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정통윤의 이 조치가 인터넷 게시물을 문제삼아 진보넷, 전국연합, 진농, 통일연대 등 8개 사회단체를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시키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적 수단 없는 업체에 ‘삭제요구’

온세통신 등은 단순히 회선제공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로서 ‘구국의 소리’를 삭제할 수 있는 서버관리자가 아니므로, 이들 업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진보넷이나 전국연합 게시판 등에 무단침입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런 기술적 수단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따라 취해진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정보가 게시돼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실제로 정통윤이 동성애 사이트인 이반시티닷컴(ivacity.com)의 웹호스

팅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 업체가 이 사이트를 폐쇄한 적이 있다.

사이트 폐쇄는 지난 3일 아침 현실로 드러났다. 진농·통일연대 등에 호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net’이 웹데이터뱅크, 데이콤 측으로부터 싸이트 접속을 차단당한 것. 결국 ‘사람들.net’이 운영하고 있는 90여 개의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당한 것이다. 다행히 ‘사람들.net’이 “정통윤의 ‘시정요구’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득, (→ 2면에 이어집니다)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지난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무성한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의 밀실 인선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인권단체의 뜻을 모아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창국 전 변협회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인권위원장 내정 발표를 통해 밀실에서 추진중이던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활동가들은 그동안 인권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권위원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반인권전력을 지닌 자들이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인권위원이 되는 걸 경계해왔다. 하기에 거듭 인선과정 공개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는 인권운동가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위원장 인선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를 원했던 시민사회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내정자가 과거 활발한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쳤으며, 사회정의의 위해 힘써 온 점을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일방적 인선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두의 축복과 기대속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청와대의 밀실 행정이 꺾어버린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에 이어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대법원장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종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의 밖으로 비판자로 기능해 온 시민사회 영역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탄생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경보음을 울릴 수 있겠는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개적이며 투명한 인선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선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이후엔 아무런 검증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라. 이 과정에서 김창국 내정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줄길 바라는 마음을 덧붙여 둔다.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제3세계에서 석유를 채굴할 때는 권력 유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군부와 돈줄이 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방 원주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와(U'wa) 원주민의 투쟁은 이러한 어두운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와 원주민들은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맥 기슭에서 자신들의 땅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며 선조 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1992년 로스엔젤레스 소재의 옥시덴탈 페트롤륨(Occidental Petroleum, 이하 OXY)이 우와 원주민의 영토에 14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추정하고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시추허가를 받자 사정은 모두 달라지게 되었다. 우와 원주민은 국제법과 콜롬비아 국내법상 인정되는 석유 채굴 시 우선권의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이 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OXY사와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1997년에는 재판소에 OXY사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9년 11월에는 OXY사의 채굴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2000년 1월부터 군부와 경찰을 동원해 OXY사가 우와 원주민들을 추방하자 결국엔 2000년 2월 군경의 합동 습격 작전 중 세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수민족들, 자본의 무차별 개발에 신음

하지만 석유 채굴과 관련된 막대한 자금을 노리는 콜롬비아 정권과 OXY사의 결탁은 이러한 우와 원주민들의 저항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1997년의 청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승리했으나 콜롬비아 국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 버렸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콜롬비아 법원의 시추 잠정 중단 결정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수의 인권단체와 환경 운동 단체들은 석유개발과 군대의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OXY사는 채굴되는 석유 1배럴 당 1달러씩을 콜롬비아 정부에 상납하고 있으며, 그 돈은 모두 군부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콜롬비아 군인은 4명당 1명 플로 석유 시설 보호 작전에 투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27일 우와 원주민은 자그마한 승리를 거두었다. OXY사가 시험시추에서 석유 채굴에 실패한 뒤 시추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앞으로 일년간 OXY사는 우와 원주민의 영토인 시리리 지역에서 재시추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 북극에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석유 시추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한 자원채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 다툼으로 인한 폭력으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박수영]

(→ 1면 '정통윤 검열강화'에서 계속됩니다)

웹데이터뱅크 측은 이날 오전 10시경 차단 조치를 풀었다. 웹데이터뱅크 측은 "자신들도 데이콤 측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온세통신은 진보넷에 회원만을 제공하며, KIDC는 전국연합 홈페이지가 호스팅되어 있는 성남넷에 서버호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농·통일연대의 경우는 '사람들.net', 웹데이터뱅크, 데이콤 등 3개의 전기통신사업자를 거쳐 KIDC와 관련을 맺고 있다. 3일 현재 진보넷이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여연, 녹색연합, 민예총 등 526개, '사람들.NET' 90여개 그리고 성남넷 등이 호스팅하고 있는 사이트 수까지 합치면 무려 6백여 개를 훌쩍 넘는다.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몇몇 게시물의 삭제 혹은 홈페이지의 폐쇄를 요구한 경우는 많았지만, 회선제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들어 새로운 경향이다. 진보넷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정통윤의 시정요구가 사실상 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이번에 게시물 삭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삭제권한도 없는 업체에게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통윤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4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보넷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전에도 정통윤으로부터 직접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 이 팀장의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정통윤의 '시정조치', 국가검열 효과

한편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업체들이 시정요구를 안 지켜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부담을 느껴라'고 요구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해, 검열을 강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정통윤의 시정요구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한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이에 따라 정통윤의 '시정조치'는 국가에 의한 직접검열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팀장은 "우리는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한다"면서, 정통윤의 검열근거 중 하나인 현 전기통신사업법만 들이댔다.

이에 진보네트워킹센터 등은 사이트 폐쇄를 경험했거나 위협당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4일 오전 11시 정보통신윤리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

진보네트워킹센터, 민주노동당 등은 이미 "'정보삭제권'이 없는 업체들에게 삭제를 요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냐"며 정통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통윤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범용·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7일(화)

제 19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중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경 등 전국 각 지역 경찰서는 7월 들어 각 대학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총련 대의원 사이에선 이른바 '한총련 대의원 탈퇴 공문'이라 불리는 문서가. 지난 7월 3일 서울중부경찰서가 서울 동국대에 발송한 '출석요구서'에는 "기일 내 경찰서에 출석하여 한총련을 탈퇴하고, 이후 활동하지 않겠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사법처리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한총련 대의원 중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보법 칼날'을 여전히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총련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대의원 30여명을 포함한 대학생 3백여 명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에 "우리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체포되거나 조사받은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이 날은 경찰이 '한총련 탈퇴 1차 시한'으로 잡은 날.

경찰은 지하철 5호선 서대문지하철

역에서부터 막다가 끝내는 "경찰서에 물러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탈퇴서를 쓰라는 것이었다"고 본심을 실도하고 말했다. 지난 98년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정 이후 처음으로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서 앞에서 신분을 밝히며 시위를 벌였지만 아무도 붙잡히지 않은 것이다.

이날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와 면담에 참여한 건국대 배민균 총학생회장은 "탈퇴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를 당하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토했다. 배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체포·구속됐다"는 이유로 풀려나기도 했다.

한총련 관계자는 "7월 이후 현재까지 한총련 대의원 3명이 구속됐지만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게 바로 국보법이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8월 들어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주장하는 리플렛 5만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8월말까지 탄원 및 서명 운동·검찰청 등 관계기관 면담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학생들을 가족의 품으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총련학부모협의회

(회장 정연오)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와대 앞길 코오롱빌딩 근처에서 △한총련 대의원 정치수배 해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들을 아들딸로 두고 있는 한학협 회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부 의원, 한총련 '이적철회' 서명

또한 전국연합, 민교협 등 사회단체는 3일 오전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정부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 이창복, 임종서, 송영길, 이재정, 김홍신 의원 등이 사회단체 대표자 73명과 함께 연대서명에 참여했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한총련 관련 수배 전면 해제와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4일에는 민가협, 한총련, 2001 민족공동행사를위한청년학생추진본부 등 사회단체들과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명동성당 농성단)은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 148명, 양심수(국보법 관련 포함) 17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1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경명 목사)가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에서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 학생회 간부 150여명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과 2일 민주당은 과거 한총련 집행간부·대의원 등 148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국보법 위반 4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각각 건의한 바 있다.

[심태섭]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가 나오면 자주 듣게 되는 불만 섞인 목소리다. 처음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면서 ‘병역거부’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췄을 뿐 ‘양심’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이다.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양심은 어떤 행위를 용납하고, 무엇을 꺼리는가...’

먼저 든 생각은 양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미 익숙해져버린 이분법을, 흑백논리를 버려야겠다는 것이었다.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생각은 바로 이 흑백논리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양심에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오히려 사람마다 다른, 자기만의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기를 꺼리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양심문제는 출발한다. 양심의 다양성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관용에서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마음은 나온다. 60억 인류에게는 60억 개의 진실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60억 인류에게는 60억 개의 양심이 있다’.

그런데 유난히 민감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감한 일에 “차마 그것은 하지 못하겠다”는 양심의 칼날에 찢리는 사람들이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못하겠다고 양심수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연습에는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여호와의 증인들, 죽은 짐승의 시체는 먹지 못하겠다는 채식인들, 새만큼 깃털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리에 귀 막지 못하는 생태주의자들... 모두 우리 시대의 ‘양심적 소수자들’이다.

하루하루 이들은 양심은 결코 편치 않다. 우선 이들의 양심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심문 당한다. “준법서약서 한 장 쓰는 것이 뭐가 어렵냐?” “남들 다 가는 군대를 왜 못 가겠다는 거냐?” “먹을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이 사회의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지는 질문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에는 묘한 공범의식이 배어있다고 한다면, 과장일까? 이런 질문들은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느냐?”고 질책하는 은근한 다그침으로 들린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법이 양심을 단죄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의 양심은 둔감해졌고, 남의 양심을 훼손하는 행위에 무감해져버렸다. 아직도 전체주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사회에서, 5천만의 양심들이 서로를 존중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기독교계의 모습에도 그 그림자는 드리워져있다. 서로의 양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를 도모하는 관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필요한 것은 무관심인지도 모른다.

<한겨레21> 기자

주간인권호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1. 정통윤, “삭제 안 해? 그러면 통신을 차단한다!”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차단돼 (7.30) / ‘동성애자 차별 반대 공동행동’ 발족, “동성애 사이트 차별 근거 밝혀라” 요구 (7.31) / 정통윤, ‘구국의 소리’ 진보넷 등의 회사 제공업체 등에 삭제 요구 (7.31) / 검색포털 네이버 (NAVER), “회원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에 스스로 등급을 정해야” (8.1) / 전능 등 사이트 폐쇄됐다 복구 (8.3) / 진보넷, 동성애자 단체 등 “정통윤 폐지” 집회 (8.4)
2. 초대 인권위원장 내정, 인권위 구성 밑에서 나오길 김대중 대통령, 초대 인권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내정 (8.1) / 인권단체 연대회의, 인권위원 후보 10명 공개추천, 추천·임명권자에 공개서한 (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 (7.24) /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해소송 (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흥우 사무총장, 차봉천 위원장 등 자진출두 (8.2) / 민주노총 이흥우 사무총장·신현훈 대외협력실장·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석방 (8.4) /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8.5)
5. 2001년 무더위, 노동자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노사정위 본위원회 회의, “노동시간 단축 올해 입법” (7.31) / 삼성그룹 해고자 ‘그룹노조’ 첫 결성, 대구시 남구청 신고필증 교부 (8.1) /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없는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대상 포함 (8.2) / 노동부 최저임금안 확정 고시, 9월부터 내년8월까지 적용, 시급 2100원, 일급 1만6800원, 월 47만 4600원 (8.5) / 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월 10만원’으로 당정협의를, 민주노총, 여연 등 “이름뿐인 육아휴직” 강조 (8.5)
6. 권력을 이용 인권말살, 끝까지 단죄! ‘조작간첩 이장형, 강희철 사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 (7.30) / 유엔 옛유고 전법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관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고 (8.2) / 폐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 (8.2)
7. ‘첨단기술’, 사생활침해의 첩병 미 FBI, 컴퓨터 자판인력 내용·전자우편 도감청에 백 오리피스, 카니보어 등 첨단기술 사용 (7.30) /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7.31)
8. MD 대신에 비에케스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 “미해군 사격훈련 중단 및 철수”, 비에케스 주민투표 68% 찬성 (7.29) /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이동배치형 대공방어망 추진”, 세계 어디서나 MD구축 가능 (8.2)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8일(수)

제 19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현재,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10일을 기해 (주)대송택(대표이사 우태주) 소속 파견노동자 89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6일부터 자사 소속 30명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대송택 측에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전원 직접고용하거나 완전도급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벗어난 것.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택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 아래 대송택 노조)과 전국민주화학생연맹(위원장 오길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7월 19일 보낸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에서 “송유관공사가 대송택과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며 송유관공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통보했다. 당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송유관공사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을 절대 야기시키지 말고 전원 직접 고용하거나 완전한 도급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계약해지 소식을 전해들은 대송택 노조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 조치를 받아들이 수 없다”며 5일 저녁부터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6

일 송유관공사 측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팩스를 통해 ‘(주)대송택 근로자 불법직 단행 동대비책’ (문서번호 TKP03000-277)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다. 이 ‘대비책’에는 “계약해지 시한인 10일까지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10일 0시부터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전원 비상 대기 근무”하라고 적혀있다. 또한 상황반, 대응반, 지원반, 후속지원반 등의 체제를 꾸리고 50명 이내의 인원이 남을 경우 경비용 역지원과 본사직원을 정문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동원계획도

이 대책에는 5명이내, 50~100명, 100명 이상 등이 남았을 경우 등에도 취할 조치를 명기하는 등 치밀한 사전 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대비책’에는 대송택 노동자들이 저장소에 잔류할 경우 군부대 및 인근경찰서에 병력출동을 요청해 정문을 통제하고, 대송택 노조원을 철수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대비책’에는 사장과 운영본부장의 서명이 날인돼있다.

사측 문서에 대해 대송택 노조 관계자는 “송유관공사 측에서 ‘10일 이후 작업장에 남으면 경찰과 군인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7일 으름장을 놨다”고 전하며 ‘대비책’이 면밀히 검토됐음을 엿보게 한다. 대송택 노조측은 “송유관공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런 조치를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쟁의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송택은 일할 권리가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기름을 수송하는 ‘한국중단송유관’(TKP, 아래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SK, LG, 쌍용, 현대 등이 대주주다. 대송택과는 지난 99년 9월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 송유관은 군사시설로 분류돼 있어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있다.

대송택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전국 각지와 미군부대에 석유를 수송하는 업무며, 대송택 노동자들은 송유관이 건설된 69년 이후로 길게는 20~2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미군 군속, 삼일사, 라이너스 등으로 소속이 계속 바뀌어 왔다. (→ 2면에 계속)

인권운동사랑방 긴급공지

최근 전국 교도소 민원실 등을 무대로 ‘재소자 인권협의회 중앙회’라는 유명단체가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1인 1구좌 1만원 후원 및 300억 원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들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소자, 재소자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

'에바다'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는 7일 저녁 8시 이사회를 열어 김철준(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김용한(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노동장애인아학 교장), 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씨 등 4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7월 10일 옛재단측이 낸 이사회 직무정지 가처분 시정이 기각됨에

따라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열린 에바다 이사회는 기존 김종인 이사장 등 9명의 이사가 전원참석, '이사추가 선임' 등 안건에 대해 4시간 여에 이르는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이사회는 임시이사장에 치과의사 윤귀성 씨를 선임하고, 임시상임이사에 이우복 목사를 선임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로, 기존의 이사진 중 에바다 연대회의의 지지를 받는 이사들까지 합철 경우 '에바다'를 민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에바다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됐다. 이사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구성됐지만, 7일 이사장직을 사임한 김종인 전 이사장 체제에서 일어난 에바다 원생들의 소란행위 등 과거상처를 보듬고 나가야 할 과제도 짊어지게 됐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날 "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에바다 운영 및 프로그램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보선)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됩니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행동연대는, 수십년간 '비판의 성역'이었던 주민등록제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활동이 주목된다. 아직 구성이 영성하지만, 행동연대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왜 주민등록제도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행동연대가 지적하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너무 많은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되며, 행정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78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가운데엔 남에게 밝히기 싫은 내용까지도 당연한 듯이 포함되어 있다. 행동연대는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 동거기간이나 초·재혼 여부, 실제 수태 기간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하나?"고 따져 묻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세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정보들은 각종 통합전산망을 통해 더욱 쉽게 이용될 수 있다. 행동연대는 "이미 30개에 달하는 행정기관이 수십 가지의 업무에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끼리 업무를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한대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이미 사기업으로도 흘러가고 있다. 제 1, 제2금융권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고 있으며, 개인 신용상태 등은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행동연대는 지적한다.

행동연대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그리고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 국민 자신의 기본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행동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이창조)

(→ 1면 '파견직 89명 계약해지'에서 계속됩니다)

대통령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하고 올해 들어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파견근로를 시정 해달라"며 지난 5월 전국민주화학생연맹(위원장 오길성)과 함께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가 7월에 노동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얻어낸 것이다. 당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는 물론 사실상 인사, 징계권까지 소유관공사가 갖고 있어 실질적인 파견직임을 인정했다. 노동부 도급을 받은 용역업체가 노무관리의 독립성 내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99년 이전까지 공기업이었던 소유관공사가 공공연히 위법한 파견근로를 자행하고 또한 시설물 소유주인 국방부가 이를 방치·조장해 왔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53명 참석자 중 51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또한 파견철폐공대위, 전국화학생연맹 등은 8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소유관공사와 국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심대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9일(목)

제 19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들의 모든 통신정보를 제출하라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는 가입·해지·변경·일시 중지 일자 및 통신일자,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번호, 서비스종류,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영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사실상 감청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적용대상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를 '통신자료'라는 개념으로 신설했으나, 통신자료의 제공절차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안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주당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검사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안은 감청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때에만 피고인에게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 집행기간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용)

온라인 log 기록, 심지어는 발신지국 위치와 실시간 ID접속지까지 망라돼 있다.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는 기본이다.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예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시작했다. 개정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 및 필요한 조사' 규정을 들이댔다. 여기에는 "조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의 수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해, 통신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수사나, 임의수사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는 통신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면에 계속)

노동사무소, '시정명령' 후에 뭘했나? "대송택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군부대 동원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현재)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적극 중재하겠다"는 등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 89명을 오는 10일자로 전원해고 조치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현재)의 조치를 둘러싸고 대송택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고소하고, 대한송유관공사노동조합 등이 송유관공사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3일 (주)대송택 소속 파견노동자 89명을 오는 1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한 데 대해 대송택노동조합은 8일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대송택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7월 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 혹은 완

전한 도급전환'을 통보하고도 이후에 노동사무소의 책임 및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송택 노조는 또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대송택과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며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말라"고 해놓고도 사실상 시정조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대송택 노조는 이어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난 6일 대송택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지금이라도 노조가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대송택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화학생연맹(위원장 오길성) 배제를 요구한 사실을 밝히고, "대한송유관공사의 '계약해지' 책임을 결과적으로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송유관노조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6일 대한송유관공사가 자체 인사명령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 30명을 각 서면발령한 데 대해 같은 날

"파업중 인사명령은 불법"이라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는 한편, 지난 7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국방부를 방문한 대송택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이병락 국방부 군수기획과장은 "우리는 기름만 받으면 된다. 쟁의행위가 발생해 기름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대송택에 손해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감독권을 행사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송택 노조 최병운 위원장은 8일 저녁 전화통화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가 노노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한송유관공사노조 등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군부대 동원계획 등에 대해 "대송택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앞으로 회사측의 조치결과에 따라 파업 등 노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송택 노조는 전국민주화학생연맹에 교섭권을 위임, 9일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8일 저녁 11시 현재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심보선)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영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6만4백85건으로, 99년 15만4천3백90건에 비해 3.9%가 증가했다. 이 중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는 11만8천3백9건으로 전년에 비해 37.8% 증가했고, PC통신은 3천4백65건으로 무려 222.3% 증가했다. 반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는 감청은 2000년에 2천3백80건 실시돼, 99년 3천2백34건보다 26.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용)

♠ 정보샘 ♠

-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 때 : 8월 9일 오후 2시
 - 곳 : 탑골공원 앞
 - 문의 : 민가협 (02-763-2606)
-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
 - 때 : 8월 10일 오전 11시 · 곳 : 필리핀센터 (성북동)
 - 주관 : 재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연대회의
 - 문의 : 송수진 (019-205-9578)
-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보장 촉구 및 산업자원의 사업주 비호 규탄대회
 - 때 :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 · 곳 : 과천 산업자원부 앞
 - 문의 : 031-213-2105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동성애자 번개'
 - 때 : 8월 10일 12시 · 곳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
 - 문의 :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02-2235-7422)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10일(금)

제 19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놀부 심보 따로 없네!

레미콘업자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자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진레미콘은 지난 8일 총괄사장 김춘수 명의로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4개월여 동안 파업중인 전국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처리로 레미콘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들먹이는 레미콘사업주들의 주장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해 돈을 버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아니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자신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철준 대표변호사는 "97년 대법원의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 관련한 근기법 상의

노동자 지위만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레미콘노조 파업의 최대 쟁점인 노동자성·노동인정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관련한 것으로 유진레미콘 주장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진레미콘이 대법원 판결을 들먹이면서 정작 그 판결이 나온 배경은 언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의 폭이 좁지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지위는 '사용주와의 종속관계, 지휘체계의 종속관계'를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이점을 인정해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업체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레미콘 업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모두 45건. 검찰은 여론에 밀려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기도 했지만 아직껏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검찰태도에 대해 김철준 변호사는 "검찰이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다루는 사건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인 레미콘 노동자 문제에 있어 회사측을 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청이 레미콘노조 설립필증을 교부한 뒤, 부당하고 사건 등에서 지노위, 중노위, 지방법원 등은 '레미콘차주가 노동자'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중노위는 특히 "노조설립신고증이 나온 만큼 회사는 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 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사기업이 교도소를 운영할 경우, '이윤의 법칙'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용(운영 경비)의 최소화라는 방침 아래 교도관 인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 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또한 탈옥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감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 도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민영교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기업의 교정업무 수행에 대한 질은 회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의 경우엔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기독교 교도소를 추진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CCP(Christi-

-an Correctional Program)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재소자가 새벽종교집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일상적으로 '선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석방 등의 기준이 되는 행형등급을 매김에 있어 특정 종교를 믿는가 아닌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재소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인이 아닌 경우 차별받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을 교도소에 파견해 일선업무를 지도, 감

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형제복지원, 양지마을, 예바다농아원 사태 등은 민간에 위탁된 시설에서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허술하며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민영교도소 설치 문제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재소자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민영교도소를 도입했던 호주의 사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호주 정부는 4년간 운영됐던 민영 여자교도소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다시 교도소를 사들여 '국영화'했던 것이다. (유해정)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지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쇄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9년 정부는 행형법을 손질해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제안서 공고와 접수, 심사를 통한 위탁자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사업자 선정과 건물 신축 및 수용준비를 감안한다면 민영교도소는 2~3년 후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아가페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모금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불교계도 법제정 이후 입장을 선화, "불교계가 재소자 교화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염려를 내비치며 민영교도소 설립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안업체측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주장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11일(토)

제 19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필리핀과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내걸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 9개가 모여 결성한 KASAMMAKO(재한필리핀 노동자공동체연대회의, 카사마코)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앵벌이 시키듯' 한국으로 송출한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동 필리핀 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카사마코의 개리(GARY) 대표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국(OWWA)이 이주노동자에게 1년에 25달러씩을 받고도, 여권을 잃어버려 대사관에 찾아가는 노동자에게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주곤 4만8천원을 받고 또 여권발급비로 9만8천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주노동에 따른 일체의 요금을 철폐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했다. 또 카사마코는 "최근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자국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대사관에 찾아가도 여행자증명서 및 여권발급비를 징수했다"고 분개했다. 개리 대표는 또 "산업재해, 임금체불, 해고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해도 대사관은 언제나 외면했다"며, "필리핀 이주노동자 대중의 요구를 모아 이주노동자 복지와 노동기본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

겠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해외송출노동자로부터 연평균 약1백20억달러를 송금 받고 있으며, 최근에 취임한 아로요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로구 해화동성당에서 봉직하는 마스(MARS) 신부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견에서 카사마코는 또 "필리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연수제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 다. (→ 2면에 계속)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말한다. 한총련은 불온하다. 왜 불온한가? 활동방식이 폭력적이고, 이념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 한총련이 친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싸고 돌아보아 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죽이는 집단이었던가? 아니다, 공안세력은 알 것이다. 한총련을 막 다른 골목으로 몰아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인지들. 한총련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은 이아무개 씨 치사 사건이 일어난던 당시, 연세대는 전생태였다. 지상과 하늘, 모든 방위를 차단하고 옥죄어오는 무장경찰 앞에서 한총련 학생은 자신 한 몸 지켜내기도 힘들었다. 정권은 항상 학생운동을 불온시켰고, 경찰은 정권의 뜻을 받들어 학생운동을 때려잡기에 바빴다. 한총련이 전 세대 학생운동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건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학생운동은 항상 공권력과 격렬하게 투쟁하며 자신의 뜻을 사회에 알려왔다. '김주열'들이 그랬고, '6·3'들이 그랬다. 80년 공수부대의 대검과 총탄 아래 고혼이 된 젊음들이 그러했고, 87년 '박종철', '이한열'들이 그러했다.

한총련은 친북적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던 60년 학생운동보다 더 친북적인가? 남북학생회담을 열기 위해 홍제동 아스팔트 위에 누웠던 전대협 세대보다 더 친북적인가? 지금 한총련을 타이르고 꾸짖는 4·19, 6·3 세대, 유신 세대, 전대협 세대들이여, 생각해보자. 당대에 학생운동이 '빨갱이 사냥'에 걸리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를. 당대에 권력과 언론의 거친 공격에 시달리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를. 사람들의 냉대속에 싸우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조차 애써 한총련을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아니다.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자신들만 변했음을 인정하기 싫은 까닭이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이치를 깨달은 듯 여론을 말하고, 대중을 말하지만 사실 대다수 여론이 학생운동에 호의적이었던 때는 4·19혁명, 87년 6월 항쟁 이외에는 없었다.

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넣었다. 학생운동이 자신의 전술적 오류를 시인한 적은 있어도 기본 주장을 바꾸면서까지 자신들이 국민의 일원임을 알리려 했던 적은 없다. 이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총련에 냉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인권운동사랑방 수련회로
제1916호는 8월 17일에
발행합니다.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회의장에서 7월 30일부터 3주간 53차 인권소위원회가 진행중이다. 인권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26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그나마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롭게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53개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인권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취할 수 없고, 연구와 조언의 역할만을 할 수 있다. 또 비록 인권전문가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배당된 숫자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돼, 상당수 위원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직 내에서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몇 안 되는 기구이다.

올해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종·소수자 차별 등을 주요의제로 채택했다. 각각의 의제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특정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채택된 문제에 한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며, 검토된 보고서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출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인권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1. 국가별 인권상황

지난해부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소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중 국가가 직접 거명되는 결의사항을 채택할 수 없게 된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함슨 위원은 침묵은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강력한 불만을

토하고,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외치형, 실종, 구금상황 하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책임자의 불처벌 등을 조목 조목 지적하였다.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각국의 고문, 차별, 난민, 사법의 처형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의 박수길 위원은 중국 국경의 탈북자문제에 대해 북한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흐름에서 다소 빛나간 상황이었으며 외교적 색채가 강해 다른 위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2. 시민·정치적 권리

두 번째 의제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문제를 다뤘다. 현재 유엔 회의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인종차별철폐 대회를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인권소위에서도 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보상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일부 유럽과 아프리카 위원들의 주도로 식민시대에 자행되었던 노예제, 식민전쟁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해 제3세계 부채탕감, 기술이전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논의 중 한국의 박수길 위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중국의 판 위원은 "식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징기스칸 시대부터 봐야 하느냐, 로마제국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는 식의 애매한 발언만 하였다. 일본의 테라오 부위원은 "내가 딸이 돌인데,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는 식의 발언만을 반복했다. 이렇게 뜨겁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G8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과 살해사건에 대해 다수의 민간단체와 일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대표는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 했다고 답변했다.

프랑스의 조아네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포함한 군법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한 NGO 발인 중 팍스 로마나는 남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 코소보 주둔 나토군 등 유엔 바깥의 외국주둔군의 인권침해 사례와 가해자 처벌권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제 자유노조연맹은 민간단체 발인 중 발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지난 4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 사건과 6월의 금융노조 이영덕 위원장의 비인간적 구금 사건 등에 대해 강경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김철효(현재 '팍스 로마나' 인턴)

(=> 1면에서 이어짐) 카사마코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최근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인해 필리핀 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생명까지 바치며 한국경제에 기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체류'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카사마코 개리 대표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와 연대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사마코는 또 "네팔, 방글라데시 등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와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사마코 외에도 '네팔인공동체(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방글라데시공동체(Bangladesh Patriot Society)' 등이 있다. [심보선]

카사마코 전자우편 kasammako@hotmail.com kasammakorea@yahoo.com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17일(금)

제 19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대표적 MP3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황교안)는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 공동운영자인 양정환 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무료배포하고 회원들 사이에 MP3 파일교환을 매개해 '회원들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양 씨 등은 소리바다사이트 운영자들로 실제 MP3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회원'들은 기소되지 않아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소리바다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았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5월 현재 회원이 4백50만명으로 집계됐고, 현재는 5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음반업체측은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소리바다사이트 운영중단을 요구하며 운영자를 저작권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음반업체 고소이후 검찰은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화사랑방

이동수



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매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선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고 일반대중들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소리바다 문제는 단지 MP3 파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공유에 있어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토론회, 온라인 시위, 법개정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태섭]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44년 9월에 히로시마로 강제징병된 광귀촌 씨는 행군중에 큰 폭발 소리와 커다란 불기둥을 목격했다. 잠시후 뜨겁고 강한 바람이 자신의 몸을 엄습했지만, 단순히 "또 폭격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후 3일동안 계속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야 그것이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2002년 8월 6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만난 이 초선인 청년은 이제 78세의 백발노인이 됐고, 그 때 입은 상처 때문에 불벌더위에도 긴 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히로시마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 공격을 받은 지 3일후, 나가사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17세의 시게토시 이와마쓰 씨도 광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일본 전 시법에는 징집대상을 20세 이상의 청년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고등학생도 징집했다.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이와마쓰 씨는 공장장문 너머로 삼광을 보았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밀려오는 강한 바람과 고열에 본능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선반밑으로 몸을 숨겼다. "신을 믿지 않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이 나를 살린 것 같다"며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치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도쿄에서 만난 이와마쓰 씨 역시 이제 철수가 됐고, 56년전 '알 수 없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반핵평화운동에 몰입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미국의 핵폭탄에 의해 고통을 겪어온 두 노인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반핵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광 씨는 지난 6월 1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같은 피폭자라도 일본에 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본 밖으로 나가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광 씨를 비롯한 생존 중인 약 5천명의 일본 '밖' 원폭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가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 씨는 일본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른바 '통달'이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계속 해외 원폭피해자 문제를 외면할 경우 유일한 피폭국가로서의 일본이 주장해온 '핵없는 세상'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언론이 광 씨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재판결과에 따라 해외 원폭피해자는 물론 대부분 폐소로 끝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후배상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정리해고' 하면 떠오르는 대우차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해서 제작됐다. 4개의 주제로 총 90분 2편으로 제작된 이 작품에 대해 노동자뉴스제작단은 "대우차 투쟁의 상황을 보다 총체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적 성격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획목적 밝혔다.

'경찰공화국, 폭력공화국'이란 첫 번째 주제는 평화롭게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향해 전경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노동자, 방패로 맞아 피를 흘리는 노동자, 사지가 붙잡혀 들려가는 노동자, 부르르 떨며 울부짖는 노동자! 이윽고 4·10 부평만행의 장면이 이어지고, "희망없는 공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농성장과 거리 곳곳에서 정권의 폭력은 항상 노동자보다 먼저 와 있었다"고 증언한다.

대우차 해외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품은 정부의 해외매각 정책을 '바보공화국의 장사하는 법'이란 주제로 비꼬고 있다. △해외매각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외국기업한테 세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믿음.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돈이 없습니다. 외환이 바닥이 났어요.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라고 국민을 현혹한다. 하지만 작품은 제일은행을 '뉴브리징 캐피탈'에 매각한 예를 들며 외자유치의 허구성을 증명한다. 정부는 제일은행에 12조5천억원이나 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겨우 5천억원에 해외 매각해 버린 것. 정리해고, 보직박탈,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외자유치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아 단순조립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위기에 선 공화국'에서는 현 시기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생사를 건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 투쟁의 한복판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작년 대우차노조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올해 1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으로 다시 투쟁을 전개하게 된 배경을 긴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작품은 이러한 노동자 투쟁 앞에서 "신자유주의의 길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꿈은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어 '노동자의 가족들'이란 마지막 주제에서 투쟁 속에서 노동자임을 스스로 깨닫는 대우차 가족들의 투쟁도 생생하게 보고한다. (범용)

배급문의처 : 노동자뉴스제작단 ☎ 02-888-5123, 사이트 www.lnp89.org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18일(토)

제 19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관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불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2호선 강남역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각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신'을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현의 자유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연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민주화된 사회라면 수많은 대중이 인터넷에서 비록 거칠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표현을 검열하는 정통윤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넷 장영경 정책실장은 △정통윤의 위원 및 위원장을 정통부장관이 위촉, 승인하며 △정통윤의 업무를 장관에게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장관에게 그 서비스의 중단을 건의하여, 장관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통윤은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을 하는 조

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

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무엇이 불온하냐고 따져 물으면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다'라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앞으로 강남역 일대, 정통윤 건물 등에서 매주 시위를 열어 정통윤을 폐지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심보선)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카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차단당한 싸이트들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분명 어떠한 폭력적 게시물보다 폭력적이며, 어떠한 불온정보보다 불온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통부장관이 위원을 모두 위촉하고, 장관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며, '불온통신'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정통윤은 자신이 민간자율기구라고 강변한다. 또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여 사이트를 폐쇄해왔고, 심지어 '다음'(DAUM)·'세이클럽'(sayclub) 등은 정통윤의 '시정권고'와 상관없이 수많은 동성애자 카페를 차단하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이라는 강제권이 있다. 결국 정통윤의 시정권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이라는 보완장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시정권고는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의 멍에 걸린다. 정통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터넷 표현물들은 모두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엮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온통신' 조항은 당연히 위헌임을 확인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폭군이 돼 버린 정통윤을 폐지하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다.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간다의 올로카-오냐고,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데 이어,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계급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결론이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우다가마 위원은 '시에틀, 프라하, 제노아 등에서 벌어진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례들을 볼 때, 세계화는 사회권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제법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갖가지 통상협정이나 경제기구보다 상위법으로 해석된다는 전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IMF는 여전히 '우리는 인권과는 상관없는 단체이다. 우리에게 국제인권법 준수의 의무를 요구하지 말라'고 끈질기게 주장, 모든 위원들과 NGO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또한 초국적기업(TNCs)의 경제활동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 범주가 애매한 '초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와 '초국적기업'을 중점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위원들과 NGO들간에서도 나뉘어져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한편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라크 민중의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

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4. 소수자 차별방지

소위원회의 가장 전통적인 의제인 이 분야에서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한 카스트 제도 혹은 비슷한 형태의 차별제도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인도, 파키스탄 정부와 수많은 관련 NGO들이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마치 국제사회의 불문율이라도 되는 듯 아무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같은 날 유엔정문에서는 가톨릭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연합으로 유엔 NGO 참가자격을 거부당한 동성에 단체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유엔의 NGO 참가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러 NGO 사이에서 오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의 와이스브로트 위원은 재일교포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포함하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한 사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목을 끌었다.

5. 여성, 현대판 노예제도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는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 마지막 의제가 시작되는 날, 회의장 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 재일교포 단체인 '조선인간제연행진상조사단'의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몇 개 NGO, 남한의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북한정부와 남한정부 역시 차례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했다. 뒤이어 중국의 판 위원과 한국의 박수길 위원도 일본수상이 2차대전 전범이 포함된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했으나 일본정부는 묵

묵부답. 그러자 일본의 요코타 위원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법적문제로 민간차원으로 배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역사교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발언하자, 박수길 위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냐?'고 반박하였다.

한편 알제리의 와자지 위원은 '50년이나 지난 문젠데, 소위원회에 벌써 7년째 거론되고 있다. 지겹지도 않냐? 소위원회를 양국간의 문제로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발언하자, 노르웨이의 에이데 위원은 '일본이 독일만큼만 전후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껏 이렇게 논의가 되겠냐? 이제 이 정도로 끝내자'고 잔뜩 달아올랐던 회의장 분위기를 수습하였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일본대표가 '종군위안부는 이미 민간차원에서 배상되었고, 관련해서 전 수상이 이미 사과도 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신사참배는 깊이 생각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일본 정부대표들이 알제리의 와자지 위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렇게 격론이 오고 갔지만, 이후 박수길 위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내년에 다시 논의한다'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제안도 없었다.

8월 17일, 제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끝났다. 다수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의심스럽고 많은 수의 관련 NGO들이 난립하는 등 한계가 많았지만, 여전히 돋보이는 일부 위원들과 NGO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인권문제들이 논의된 회의였다. 한편 외국주둔군, 식민지역사 청산, 집회결사의 자유,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수인처우 등 보편적이며 국내에서도 중요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국제적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냐 하는 숙제를 남긴 회의였다.

김철호(현재 '팩스 로마나' 인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1일(화)

제 19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만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아래 학생연합)은 지난 15일부터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교운영위로!” 라고 주장하며, ‘학생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에도 서울, 부산, 광주, 목포, 순천을 거점으로 낙서판, 피포먼스,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연합 서울지역장 황두영 씨(인창고 2년)는 학운위에 학생이 참여하는 의의에 대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운영위는 학교급식, 과외 교육활동, 학교장 추천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 황 씨는 “단적으로 말해 지금 운영위는 교장이 결정사항들을 읽으면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기부금을 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에 참관조차 할 수 없고, 누가 운영위원이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운영위의 폐쇄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런 학교운영위 참가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징계·퇴학 운운하며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학생연합 광주지역장인 박형준 씨(조대부고 2년)는 7일 학교측으로부터 학생연합 결성과정에 대한 ‘심문’을 당했고, 15일 광주 5·18 시민공원 앞에서 캠페인을 한 후 자퇴 혹은 전학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연합 부산지역(준)장인 송00 씨는 집회신고한 사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한국의국어대학교 용인배우터 동아리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탈퇴서’를 쓰지 않고 구속이 안 되기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회에 일부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직책상 한총련의 활동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며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관련 이념과 활동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구속’ 문제에 있어 몇 가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전제’는 흔들리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예전의 경우 한총련 대의원은 가담 정도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됐다.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기소이후 보석을 통하거나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을 석방했던 것이다.

또한 법원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 ‘직책상 단순 참가했다’고 인정한 점도 흥미롭다. 한총련 대의원 관련 구속자 가운데 90% 이상이 학생회 선거를 통한 ‘당연직 대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다른 대의원에게도 검찰의 ‘구속 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이적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련 없이 8월 들어 한총련 대의원 관련 구속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탈퇴서 작성 압력도 여전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체포와 연행을 이어가고 있는 검·경찰과 구속 여부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법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자기 모순’은 53년에 이른 국보법의 치매 증상인 듯 하다. (심태섭)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지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보다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이 달리면, 혹은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등급을 달지 않으면, 윤리위의 배포 기준을 내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9월부터 대부분의 PC방에서 차단된다. 물론 윤리위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옵션'이다. 그러나 윤리위의 기준을 '디폴트'로 채택할 많은 학교나 도서관, 작업장에서는 차단될 것이다. 이것은 검열이다.

그런데 내가 일년간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포르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이다. 이럴 때 무척 답답해진다. 왜냐하면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받는 상황 자체가 낯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반여성적이고 성폭력적인 포르노를 반대한다. 포르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터넷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이 포르노를 없앨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또한 나는 성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이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법으로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성의 성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성폭력인 사이버 성폭력을 다룰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인터넷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면 포르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사라진다. 그것은 감압적인 경찰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네마다 구석구석 경찰을 세워두고 날마다 검문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인터넷 규제는 법에 따라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도로,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나오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검열에 대한 반대는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째서 포르노에 대한 반대가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데 혼란을 주는가. 어째서, 때로는 포르노에 대한 반대가 정부의 검열에 명분을 더해주는가. 표현의 자유가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천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무척 슬프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주간인권호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1.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우리는 갑니다'
 현대미포조선, 중대재해(불)로 노동자 4명 사망(8.6)/ 부모 야간작업 하는 동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 불나 사망(8.8)

2. '불법체류자' 줄이기, 그 다음은?
 대구시, 삼성그룹 노조신고 받은 남구청에 취소 지시(8.7)/ 서울지법 남부지원, 장문기 '데미콘' 노조 위원장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8.8)/ 노동부, 현행 '2+1'에서 '1+2'로 바뀌 '불법체류자' 줄이기로(8.18)

3. 법, 여성에게 무엇인가?
 여성부,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추진(8.8)/ 법원, "나이숙인 매춘 청소년 법의 보호 못받는다"며 고용업주 영장기간-여성단체 등,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8.14)

4. 바로 옆에도 내가 생긴다!
 서울기독교청년회, 회원정보 잠사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하기로(8.8)/ 독일·프랑스, 인간복제 금지 조약 체결촉구(8.8)/ 미국 법원행정처,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관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잠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사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련(8.14)

5. 미군이 관여됐으면 무조건 감추고 본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첫인정 "과거 여러차례 오염도양 제거"(8.10)/ 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독사평역 오염기름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8.16)/ 문화일보, 정부-독사평역 오염기름 미군보고서 은폐(8.17)

6. 과거청산, 인간존엄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강경대·김규정·이재호 씨들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구소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일제만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명 청원서 국회제출(8.14)/ NHK방송 조사결과, 일본 왜곡교과서 12곳만 채택(8.15)/ 법무부 발표, 일제전범 20명 입국금지, 추가 금지 가능성도(8.16)/ 의문사 박태순 씨, 사망 9년만에 장례식(8.19)/ 문화일보, 노근리 관련 공중공격 부인한 사실 뒤엎는 문서 발견 보도(8.20)

기탁소식
 정부, 새만금사업특별대책협의회에서 7천4백억 추가 투입 결정(8.6)/ 민주노동당 8·15 특별선언, "남한이 먼저 군축해야"(8.14)/ 평양 '8·15 민족통일 대축전', 남북해외동포 4천여명 참가해 시작(8.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2일(수)

제 19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석

편집인 : 심보선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류·삼일-라이너스-대송택, 버려진 TKP 노동자

대한송유관공사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노조 혐오증으로 인해, 용역업체인 대송택 소속으로 TKP(대한중단송유관) 업무에 종사했던 노동자 84명 전원이 지난 10일자로 일괄 계약해지 당했다.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성남노동사무소의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원장은 "계약적이라도 고용되리라 생각했는데 해고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시의 충격을 이야기했다. 이는 비단 강 부위원장만이 아니다. 당시 TKP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송택 노동자 84명 말고는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대송택 노조는 지난주 1차 상경투쟁을 전개했고, 이번주 2차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TKP란 한반도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유(IP-8)를 수송·저장하는 시설로서, 69년 주한미군에 의해 건설됐고 92년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됐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TKP 업계는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TKP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동일했다. 강 부위원장은 9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TKP 업무에 종사해 왔다. 계약해지된 노동자 중에서는 심지어 69년 TKP를 건설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도 존재한다.

소속변경 4번, 노동조건 계속 악화

애초 주한미군이 TKP를 소유했을 때 TKP 노동자들은 군속신분이었다. 92년 TKP 소유권을 이전받은 국방부는 TKP 관리업무를 SK에 위탁했으며, SK는 오륜사와 삼일사라는 용역업체를 설립하여 TKP 노동자들을 여기에 소속시켰다. 이는 노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당시 SK는 군속신분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신규사원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연차도 일주일 가까이 줄고 호봉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TKP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96년 SK는 두 용역업체를 라이너스라는 하나의 용역업체로 통합했다. TKP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소속이 또 한번 바뀌게 된 것. 하지만 이러한 소속변경은 99년 한번 더 일어났다. 국방부가 TKP 위탁관리 업체를 SK에서 대한송유관공사로 바꾸었기 때문.

당시 대한송유관공사는 대송택이라는 용역업체를 만들어, TKP 노동자들을 대송택에 소속시킨 후 99년 10월 1일자로 대송택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대송택은 TKP 노동자들을 1년 계약직 신규사원으로 받아들였고, 또 다시 이전까지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여금이 삭감되고 학자금 지급도 사라졌다.

(→ 2면에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 발간!

2001년 1월, 명동성당 들머리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부터
 6월 말 단병호 위원장의 명동성당 농성시작까지
 갖가지 인권사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가 나왔습니다.

모든 인권관련 사건이 담겨있지는 않지만
 올해 상반기 한국인권상황의 흐름이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에 있습니다.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있어
 인권관련 사건을 더욱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활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관장을 단장으로 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한국 비정부기구 참가단'(아래 참가단)은 이금연 관장을 비롯,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강은경 사무국장,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 지부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오는 24일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정부간 회의 교섭 단체 자격을 획득한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참가단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기

♠ 정보샘 ♠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때 : 8월 22일(수), 오후 2시
-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발제 (1) :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 · 발제 (2) :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이인호, 중앙대 법대) / · 발제 (3) :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이은우, 민변)
- 문의 : 02-765-4708

간 중 열리는 청년포럼·비정부기구포럼·정부간회의 등 행사에 참가하고, 남아공 현지에서 한국내 이주노동자·난민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또한 열 계획이다. 특히 현행 산업연수제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기본적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진홍보전도 마련해냈다.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1명만 해준 현실에 대해 법무부 통계자료를 들어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

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아공 현지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며 각국 정부 인사·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참가단 단장인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환기가 이뤄지고 인종차별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대회를 통해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갖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은 귀국이후 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보고대회를 열고,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활동에 대한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심태섭]

(⇒ 대송택 노동자 '계약해지', 1면에서 계속)

비용이 2배 들어도 노조는 안 돼

TKP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대송택, 위탁관리업체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주 국방부와 다중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TKP 업무에 종사해 왔던 노동자들은 결국 1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 이러한 심각한 고용불안과 지속적인 노동조건 악화. 작년 1월 14일 TKP 노동자 84명 중 78명의 참여로 노조를 결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송택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용역업체이기때문에, 대송택과의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대한송유관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 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협조 없이는 대송택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자신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노조의 교섭요청을 묵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TKP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송유관공사와 대송택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대한송유관공사는 용역노동자 1인당 2백38만원의 비용을 대송택에 지급한다. 하지만 대송택은 TKP 노동자 1인당 평균 1백1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노조혐오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바라는 것은 고용안정 뿐

현재 대송택 노조는 국방부 앞에서 매일 오전 7시 30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3차, 4차, 계속해서 상경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송택 노조 박상훈 사무국장은 자신들의 요구를 간결히 정리했다. "우리의 투쟁은 고용불안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용안정 뿐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3일(목)

제 19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480여명 징계, 4만여 한통노동자에 2개월임금 반납요구도

지난 6월 9일 노사합의서를 앞세워 114 분사와 반대투쟁을 무마시켰던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이 이후 반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합의 직후 분사화에 반대했던 114 노동자 5명을 파면하고 480명을 해임했다. 재심절차를 거쳐 각각 징계와 감봉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농성 참가자 전원을 징계한 것으로, "농성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한다"고 했던 당시의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또 한국통신은 지난 9일을 기해 한통노조 서울지방본부 이기국 조직국장을 비롯하여 파면 7명, 해임 11명, 징직 12명 등 견책 이상의 중징계를 60여 명에게 내렸다. 현재 김배정 서울쟁의국장은 해임이 의결됐고, 나머지는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들은 모두 분사와 반대투쟁 등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번 징계는 특히 지방채임 발령과 맞물려 있어, 한국통신이

이번 기회에 노조활동을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배치교육에서도 불이익·차별

이에 앞서 7월 2일 한국통신에서 분사된 한국인포서비스(KOIS, 구 한국통신114)로 전직하는 것을 거부했던 농성 참여자 485명은 재배치교육 등에 있어서 불이익과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노사합의서에서 "114 안내업무 분사화 관련 전직 미동 의자에 대해 재배치 및 직무전환 교육"을 약속했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6월 하순경부터 시작된 재배치교육 과정에서 회사 임의로 70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70점이 넘는 노동자만 전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약 200명 정도가 교육을 마친 상태고, 이중 소위 합격자는 30%도 안 된다고 한다. 이기국 조직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필기 66점, 실기 34점으로 총 100점 만점인데, 필기점수를 만점 받더라도 실기점수를 3.4 정도 밖에 안 쥐 69점대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 조직국장에게 의하면, 각 전화국에 배치받은 농성 참가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다. 또 각 전화국은 이들에게 컴퓨터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도 지급하지 않은 채 ADSL 판매실적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임단협안에 '2개월치 임금 반납' 요구

한국통신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통신은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한국통신 4만여 노동자들의 2개월치 임금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안을 내놓은 것. 지난해 114 분사화가 완료된다는 가정 아래 114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통신의 설명이다. 결국 114 노동자 3천여 명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임금과 전직 미동일자 4백80여 명에 대해 연말까지 지급될 임금이 1천9백56억원에 해당하고, 이 적자분은 한국통신 노동자 전원이 2개월치 임금을 모두 회사에 반납해야 해결된다는 논리다.

"노사합의 무시하며 한마음 대잔치"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한국통신은 오는 24일부터 'Let's KT 한마음 대잔치'라는 전국적인 행사를 추진해 노사화합의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뻔뻔스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국 조직국장은 "한국통신이 노사합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되물었다. 또 "114 분사화 문제는 회사측의 잘못인데, 그에 따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 2면에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 발간!

2001년 1월, 명동성당 들머리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부터

6월 말 단병호 위원장의 명동성당 농성시작까지

갖가지 인권사건과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가 나왔습니다.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해소송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책무이지 결코 도의상 책임에 그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박탈돼있는 현실이 변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조미경

씨는 소장에서 "대학수능을 앞두고, 오목교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니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야하는데 양평역(5호선)에 리프트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30~40분을 가야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13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로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다.

소송에 대해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9일부터 디지털로와 imbc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38건의 무료공익소송 신청자들 중에서 이동권연대의 소송이 공익소송에 적합하다고 판단, 선정되었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있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과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심대섭)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징계자를 중심으로 한동노조 징계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통신에 징계 철회 등 노사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2시 성남지방검찰청 및 5시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편 24일 서울 한마음 축구대회와 27일 부산 한마음 행사에 참여해 'Let's KT 한마음 대잔치'의 기만성을 폭로할 계획이다. 114 분사와 반대투쟁 이후 한국통신의 노조 무력화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징계투쟁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범용)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김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민족통일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한 1백여명의 대표단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총 등은 22일 성명을 통해 "평양에서의 방북대표단의 행동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북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권)는 성명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통일문제의 올바른 실천 방향을 둘러싼 문제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어 "(방북대표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대표단의 행동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각을 방문해 남긴 몇 마디 문구를 가지고 온 나라가 벌집이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반문하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넘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 사태는 우리사회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수구세력의 광기에 감대중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다"며 "통일운동 지도자들의 연행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4일(금)

제 19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정부가 지난 20일 국무총리훈령(제 420호)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아래 기획단)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뉘어져, △사무처기구·정원안 준비 및 직원 총원 지원 △예산 확보 및 사무실 마련 △시행령 및 규칙 시안 준비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시안 준비 등 국가인권위의 주요 뼈대를 만들게 된다. 이로써 기획단을 매개로 정부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획단 구성과정이 '은밀'하고도 '배타'적으로 진행된 탓에 인권단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창립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 소속 34개 인권단체들은 줄곧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했지만, 인권위원장(김창국 변호사) 내정에 이어 또 다시 '후문'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획단 법제

연반장 조용환 변호사는 기획단에 참여한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김창국 내정자가 아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역할에 상이한 시각

이에 대해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다산인권센터 소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기획단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활동하고 있는 연대회의의 존재를 알면서도, 연대회의를 배제한 채 기획단 구성을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반장은 "기획단은 앞으로 선임될 인권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임시적 기구일 뿐"이라며 기획단의 위상을 제한적으로 설명했다. 나아가 "기획단은 정부측 창구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단의 위상에 대한 조 반장의 설명은 인권단체 연대회의를 배제함으로써 일고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오히려 인권단체들 쪽에서 기획단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형편이다.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기획단 외에는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책임질 단위가 없는 상황기에, 기획단의 실무적인 과정은 국가인권위 전체의 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장은 "기획단은 정부측 창구로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기 보다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 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교정시설에 상당한 변화 예고

인권위의 가장 큰 강점은 시설 방문조사권에 있다. 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들은 교정시설을 둘러볼 수 있으며, 재소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감시의 눈' 밖에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자라온 교정시설도 이제는 상시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문조사가 위력을 갖기 위해선 '불시 방문'이 가능해야만 한다. 예정된 방문은 잘 정돈된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대본에 쓰여진 재소자의 얘기를 듣는 것 이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의 입회없이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야만 한다.

재소자의 '입'을 연다

인권위의 또 하나의 강점은 재소자의 진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은 재소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재소자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소자들은 청원서 집필은 물론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기각, 각하되거나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위의 진정권 보장은 단연 주목받을 만하다.

앞으로 교정시설은 재소자가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정을 위한 장소와 물품을 즉각 제공해야한다. 만약 이를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보는 경우 관련 교정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해당 교정시설을 방문해 재소자를 자유롭게 면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해 외부진료를 받게 하거나 일정기간 다른 장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인권위의 장점이다.

법적 한계도 많아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활동엔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큰 한계는 조사 절차다. 아무리 심각한 진정이 들어와도, 인권위는 반드시 관련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먼저 받고, 진술서를 검토한 뒤에야 그들을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인권위가 교정공무원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듣기까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다보니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놓치기 쉽다. 특히 교정시설은 그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느 곳보다 관련 증거의 인멸과 증인의 회유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조사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구제,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위의 목표는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

신속구제 사실상 봉쇄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사법적으로 종결된 경우 등에는 각하된다는 점이다. (단, 독직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구제수단으로 적절한 효력을 보지 못한 사안은 달리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 특히 법무부는 물론 검, 경이 그동안 교정시설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처리했음을 감안할 때 수사 종결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막는 것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다.

그밖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44개 교정시설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직원을 충분히 배정하고 지방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이후 시행령제정 및 인권위 구성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부분이다.

인권위 설립은 교정시설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인권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인권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보영·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5일(토)

제 19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촉복속에 출범희망"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 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 설립 준비기획단'(단장 김창국, 기획단) 구성과 관련,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이 의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물리적 시간의 장벽 외에 법적지위의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출범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 더욱 큰 문제가 낳는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기획단이 출범하기까지 상당수 인권단체들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밀실행정 정보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갈라 서로 불신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활발한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시민사회내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온다면 그 후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고 묻고, "책임있는 당사자

들이 나서서, 준비과정에 대해 성실히 해명"이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는 설립과정에서부터 다른 정부기구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며 "절차를 생략하여 제 때 문을 여는 것

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인권·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노동·농민·빈민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사회의 촉복 속에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지난 5월 25일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의 고문, 대표단, 집행위원 등을 초청,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고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실에서 열 예정이다. (심보선)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다시 마녀사냥이다. 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언행을 빌미 삼아 시작된 이번 사냥은 강정구 교수를 구속시키는 데서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강 교수의 방명록에 온갖 색깔을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논쟁으로 마무리지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성의 목소리' 대신 '광기의 명령'에 복종, 강 교수를 화형대에 올렸다.

강 교수에 대한 처벌이 억지라는 점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이 오로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사상 토론회'까지 들춰내 그의 '본심'을 추적한다. 거기다 검찰은 주체사상 토론회 자료집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혹 재판에서 '찬양교무'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어떻게든 강 교수를 처벌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한 정주영은 처벌하지 않아도, 강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스스로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내심'을 밝혀도 공안당국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버리면 처벌이 가능한 법. 막걸리보안법, 고무줄보안법이 존재함을 이번 사태는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이 회대의 괴물은 지금도 우리의 '내심'을 겨냥하면서, 칼날을 갈고 있다.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지난 20년간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무미아 아부-자말(Mumia Abu-Jamal) 사건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1981년 무미아는 거리에서 경찰과 흑인들의 실랑이를 목격, 제지하려고 접근했다가 그 경찰에 의해 총상을 입었고, 경찰도 그 자리에서 총상으로 사망한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무미아를 구타 후 병원으로 옮기고 무미아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그는 1982년 6월 재판 시작 한달만인 7월 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무미아가 병원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검찰측이 제시한 탄도학적 증거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 경찰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은 38구경이었으나 무미아가 소지했던 총은 44구경이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사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총과 손의 화학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의한 흑인민권운동의 탄압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무미아는 불법적인 경찰의 흑인 구타 및 탄압을 계속 비판하고 있었고, FBI의 요주의인물 리스트에 올라있었다. 또 증인들은 현장에 무미아 외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나 경찰은 처음부터 무미아만 구속했고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무미아는 지난 20년간 필라델피아 대법원, 연방 대법원 등을 통해 항소등을 통한 법정투쟁을 계속해왔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1995년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에 대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윌리엄 새보 판사가 자신이 판결했던 원심을 심리, 원심보전 판결을 내렸다. 1999년 10월 사형집행을 열흘 앞두고 무미아 측은 인신보호청구소송(writ of habeas corpus)을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게되며 윌리엄 요한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게 된다.

그러나 인신보호청구소송에서도 미심쩍은 판결은 계속된다. 지난 7월 19일 요한판사는 자신이 살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아들드 베벌리의 법정증언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디포지션요구도 묵살했다. 디포지션이란 후에 증인의 제진술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증언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17일 유죄확정후 구제법(Post Conviction Relief Act)의 재적용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으나 무미아를 수감할 교도소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참석도 무산됐고, 판사 파멜라 뎀브는 새로운 증거제시기한인 60일이 지나 재판은 무의미하다는 검찰 측에 동의했다.

이제 무미아측은 오는 9월 7일 무죄증거가 법정에 제시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제출하게 되고 그에 대해 검찰측은 9월 21일까지 반론을 제출하게 된다. 무미아 지지자들은 8월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5일에도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무미아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박수영)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오는 28일 NGO 포럼을 시작으로 9월7일까지 열린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최의팔 회장 등이 이주민단체 및 지원단체간의 네트워크인 '아시아이주민포럼'(Migrant Forum in Asia)의 구성원 자격으로 참가한다. 또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등 이주노동자 관련단체가 참가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한국비정부기구 참가단'(인종차별철폐 참가단)은 이금연 단장 등 5명도 24일 출국했다. 외노협과 '인종차별철폐 참가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외노협이 포함된 아시아 네트워크 단체들은 아시아 이주노동자 상황 등에 대한 통합자료집을 통해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사진전도 열 예정이다. 외노협은 또 NGO 포럼에서 국제이주민권리위원회(Migrant Rights International) 등이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할 예정. 또한 외노협은 아시아 네트워크 등과 함께 아시아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한 통합 자료집을 발간한다.

'인종차별철폐 참가단'은 청년포럼·비정부기구포럼·정부간회의 등 행사에 참가하고, 남아공 현지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문제 등을 알리기 위해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사진홍보전 등을 열고 집회도 할 계획이다.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오니즘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스트로 대표되는 계급제도, 민족갈등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사태 해결 및 개선책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10일 끝난 '3차준비위원회'(3rd Preparatory Committee)에서도 선언문과 행동계획 채택을 둘러싸고 민감한 문제는 본 대회로 넘겨 치열한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8일(화)

제 19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충중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보안관찰법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 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씨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이 씨는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9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일, 출소교도소, 출소사유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 결정'을 받은 피처분자는 △원적, 본적, 주소, 동거인 상황 및 교우관계, 직업, 월수입, 재산상황, 학력' 등을 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여행 등 주요활동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10일 이상 주거지 등을 이탈, 여행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여행의 목적지, 목적, 기간, 동행자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보선)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가 자신들의 회의록 전문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8월 6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7일 '비공개결정'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9일에 이루어진 정통윤의 회의록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공개요구를 했으나 정통윤은 정보공개법 7조 ①항 5호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것.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오는 31일 정통윤 앞에서 이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심보선)

알림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8월 27일자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에 류은숙 사무국장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다. 어찌 하루라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는지. 이합집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매일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사건들의 방산의 일각도 되지 못할, 그러나 우리들을 심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범죄들, 거기에 환경 호르몬, 적조피해 등등.

나날이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매일 쏟아지는 신문기사들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본의 왜곡 교과서에 분노하고, 내년 있을 월드컵을 기대하며, 북마전과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며 정치에 대한 냉소만을 키워 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어가는 사교육비에 가슴 졸이는, 그러한 일상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표명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과는 발톱 끝만큼도 친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질세라 서민들의 표를 추수하려고 덤비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들고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이 진정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바로 스스로를 정치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다. 생활의 권리를 지키고자 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세를 배우가며 그러한 투쟁의 확장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어 가는 것이다.

경제적 권리, 아니 생존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지금 난데없이 무슨 정치적 권리 운운이냐고? 지금부터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노동자들이 어찌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내년 있을 선거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투표소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리고 노동자의 전망을 움켜쥐고 당당히 살아나가는 정치적 주체로 설 것인가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바로 그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 발간!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갖가지 인권사건과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가 나왔습니다.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1. 국가인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 활동시작 (8.20) /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에 준비과정 해명' 요구 (8.24)

2. 구속된 '방명록 내심', 표현의 자유도 '구속'되다 수원지법,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 구속영장 기각 (8.20) / 공간기관, 민족통일축전 참가단 중 강정구 교수 등 포함 16명 긴급체포 (8.21) / 법원, 민족통일축전 참가단 중 7명 전원에 구속영장 발부 (8.24)

3. 과거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최종길교수 '간첩' 자백했다고 조작했다"고 발표 (8.20) / '노근리' 변호인단, 미 정부를 정보공개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기로 (8.21) / '김준배 씨 사망사건조사' 현직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석요청에 불응 (8.23) / 일본 법원, 45년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에 일부 배상 판결, 공식사죄·사망자 배상은 빠져 (8.24)

4. 미국의 '실력행사', 재판권은 휴지조각?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약식기소된 맥팔랜드씨에 공소장 송달 이틀째 무산 (8.21) /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씨, 징계처분 받고도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 (8.23) / 녹색연대, 주한미군의 한국재판권 불인정 선언에 항의해 맥팔랜드 공개수배 (8.23)

5.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논하지 말라 미 의회 보고서, 2000년 무기판매액 369억 달러, 한국 무기구입액 기준 세계 3위 (8.20) / 브라질, 외국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취소, 카피약품 무상공급하기로 (8.22) / <아사히 신문>, "일본 공안조사청, '파괴적 단체 규제 위해' 재일동포 3백명 이상 뒷조사" (8.25)

6.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출발 한국참가단 간담회, 한국이주노동자, 난민, 매매춘 문제 적극 제기하기로 (8.21) / 외노협,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남아공의 더반으로 출국 (8.24) / 미국, "흑인노예 배상 못한다"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 (8.25)

기탁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해소송 (8.22) / 서울지법, "송두울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 (8.23) / 서울지법, "음악과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해소송 책임 인정" (8.25)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 보호' 전 사업장 적용, 여성 강내근로 완화 (8.26) / 법원, 박지주 씨 소송 관련 현장검증 (8.2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29일(수)

제 19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노조파괴 공작비 120만원에 얽힌 사연 동작구 1번 마을버스 파업 73일째

전국민주버스노조 중앙운수분회 조지부장 유기철 씨는 중앙운수 조OO 대표이사과 먼 친척 간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유 씨는 한때 사측이 제시한 노조탈퇴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조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처음부터 강경한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보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가 살아온 지난 1년은 중앙운수의 노조파괴 공작과 노조의 파업투쟁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때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들로서, 당시 노조탈퇴 작업을 위한 활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중앙운수는 이 극비회동에 참석했던 정 씨에게는 조 상무 명의로, 최 씨에게는 중앙운수 명의로 각 60만원씩을 무통장 입금시켰다. 중앙운수분회는 최근 이 사실을 정 씨와 최 씨의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따라서 중앙운수분회 조창제 위원장 등은 지난 7월 12일 중앙운수 조 대표이사과 조 상무를 상대로 동작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다시 가입한 이유

애초 28명으로 출발했던 노조가 중앙운수의 회유에 의해 지난해 8월 말에는 고작 6명만 남아 거의 무력화됐다. 이에 유 씨는 '노조를 배신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자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유 씨의 인생은 극적으로 반전된다. 지난해 8월 26일 조 상무는 노조 사무실에 혼자 있는 유 씨를 찾아왔다. 이때 조 상무는 친척 관계를 다시 들먹이며, 이번에는 아예 "노조를 탈퇴시켜 달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유 씨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월급을 20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비록 일주일도 안 돼 회사를 떠나지만, 유 씨가 각서에 서명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

(→ 2면에 계속)

♠ 정보샘 ♠

□강정구 교수 석방 대책위(가칭)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8월 30일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인사동)
· 문의 : 민교협 (02-888-3683)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처벌을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8월 29일 11시 /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29일(수), 오후 12시
· 장소 : 대학로 해화로타리 세븐 일레븐 앞 버스정류장
· 문의 : 장애인이동권연대 (02-766-9101)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데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삭제합시다! -
· 일시 : 2001년 8월 31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 (6번출구 기업은행앞)
· 문의 : 진보넷 (02-7744-551)

여의도를 울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

한국통신 계약직, 대송택, 린나이 코리아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옥상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며 정부당국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신승호 재정국장 등 5명은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한국통신 계약직 문제 즉각 해결'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울리게 했다.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체불임금결,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감요구 자료를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 전달하러 의원회관에 가는 길이었다. 신승호 국장 등은 이날 '정치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예정에 없이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 여의도 앞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대회'에 사용할 플래카드를 펼쳤다. 이와 같은 시각 대송택 백성현 노조원 등 2명이 국회 앞 잔디위에서 '대한송유관공사의 불법파견 시정 및 고용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를 벌이다 20여분만에 전원 국회 경비대에 연행됐다. 또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파견철폐공대위 소속 3백여명이 노동자들의 연행에 항의하다 명월관 조형수 노조위원장, '레미콘' 노조 박돈규 조합원 등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연행된 17명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공식선언한 지금도 7천명 계약해지의 고난을 넘어 파업 259일을

맞는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부당노동행위에 희생당한 대명사가 된 레미콘 기사"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1순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쟁의에서조차도 노동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또 △한통계약직, 레미콘,

린나이 코리아 노조 등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유린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들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앞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고난을 본 따 '비정규직'이라 적힌 대형 십자가에서 노동자가 피흘리는 퍼포먼스를 연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난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신진영)

(=> 1면 '노조파괴 공작비 120만원~'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는 유 씨에게 남아있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행위. "나, 이 회사 절대 안 나가! 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끝까지 싸울 꺼야!" 유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바로 노조에 재가입하고, 이후 조창제 위원장과 함께 작년 임단협 투쟁에 앞장섰다. 작년 임단협 투쟁은 총 13명이 참가하여, 10월 3일 총파업 하루만에 중앙운수와 임단협을 체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울해도 변함없는 노조파괴 공작

중앙운수분회는 28일 현재 총파업 73일째를 맞고 있다. 작년 총파업 하루만에 사태가 해결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앙운수의 집요한 노조파괴 공작과 터무니없는 협상안은 그 이유를 말해 준다.

지난 6월 17일 중앙운수분회는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자격증 없는 정비부장 교체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차고지를 점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중앙운수는 18일 교섭위원 4인 및 조합원 1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20일 승합차를 렌트해 임시로 버스를 운행하는 식으로 맞섰다. 이어 7월 6일에는 조합원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정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조창제 위원장에 대해서는 7천8백만원, 이석채 조합원에 대해서는 7천6백만원이 가압류된 상태로, 조합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또 중앙운수는 애초 임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지만 회사 사정이 왜 어려운 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조 대표이사는 "운전기사 주체에 경영에 왜 신경쓰냐?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보여줘야 하나?"고 일축했다. 한편 노조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할 테니 3년간 무쟁의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자금사정 보다는 노조 자체에 대한 중앙운수의 혐오감이 문제였던 것.

임금인상에서 민주노조 사수로

중앙운수에 대한 조직부장 유기철 씨는 입장은 단호하다. "애초의 임금인상 투쟁이 지금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싸움으로 바뀌었다. 조만간 가족대책위를 구성해 가족 전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회사가 노조의 입장을 수용할 때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규탄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30일(목)

제 19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괴한, 노래단체 엿보다 붙잡히다

적어준 직장 연락처, 국정원 구내전화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가 노래단체 '우리나라' 사무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경 사무실 창 밖에서 사진을 찍고 달아나던 이대식 씨를 붙잡았으며, 이 씨가 떨어뜨린 메모지에서 단원 000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단원들에게 붙잡힌 직후 카메라 뚜껑을 열고 필름을 훼손시켜 증거물을 없앴다. 당시 사무실 인근에는 이 씨를 태우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경기32두9334)과 운전자가 대기중이었으며, 이 차량은 경찰차가 출동하자 황급히 사라졌다고 '우리나라' 측은 전했다. '우리나라' 측은 "주차된 차량 안에 '우리나라'라는 우리단체 이름이 적혀있는 서류봉투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단원들은 30여분 후 이 씨를 데리고 인근 '서교 파출소'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문제의 남자가 60년생 이대식이라고 확인했다. 이 씨는 자신의 직업을 '대왕양산'

영업과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직장 전화번호(02-3414-9553)를 단원들에게 직접 적어줬다.

단원들은 "3414-9553번 쪽에서는 세 차례나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이 씨가 누군가와 핸드폰 통화를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상호는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런 사람은 근무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전화번호는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구내전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나라' 측은 국정원의 사찰행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우리를 사찰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불법사찰을 벌인 직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할 것"을 주장했다. 9553번쪽은 29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대식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기사가 거듭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번호음이 계속되거나 수화기만 들었다 놓는 등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씨의 사진, 망가뜨린 필름, 전화번호를 적은 자필 메모 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창립된 노래단체로서, '경의선을 타고' 등 통일노래를 창작 보급해왔다. (이창조)

정보운동 입문 기획강좌 '정보운동과 인권' 진보넷, "지배적 정보화, 인권으로 맞서겠다"

정보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땅히 없던 차에, 정보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기획강좌가 준비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킹센터(소장 김진균, 아래 진보넷)는 9월 17일부터 한 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을 운영한다. '정보화와 인권'은 진보넷이 기획한 최초의 정보운동강좌로서, 각 요일별로 △감시와 프라이버시(월)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수)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목) △정보화와 사회운동(금)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진보넷은 현 상황을 "지식은 상품으로서, 프라이버시는 상품적 가치로서 교환되고" "표현의 자유는 '불온'이라는 잣대에 짓눌려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강좌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화를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보화와 인권" 강좌는 지배적 정보화에 대하여 '인권'으로 맞선다고 설명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지배적 정보화'란 자본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보화를 말하는 것. 진보넷 오병일 사무국장은 정보의 공유를 가로막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노동통제와 이윤을 위해 작업장 감시기술이 발달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정보화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번 강좌는 지금까지 다뤄져 온 정보운동 주제들을 망라한다"며, "정보운동의 이슈들을 인권의 개념으로 고민하고, 이것이 역으로 기존의 인권개념을 반성할 수 있는 토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가로 입문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며, "향후 정보운동 활동가로 의지가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강료 : 강좌당 3만원, 문의: 02-7744-551, 담당: 오병일/이은희, 수강신청: http://networker.jinbo.net/education) (범용)

《인권하루소식》 제1924호 (2001년 8월 29일자)가 발송 중 착오로 인해, 일부 독자에게 제 때에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더반입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먼 여행을 마친 우리 이 더반에 아직 더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2001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민간단체 포럼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의 한마디는 인종차별문제가 얼마나 다루기 힘들고 논쟁적인 주제인가를 한마디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 큼은 21세기에 들어선 인류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세기, 인종차별이 없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순간임이 틀림없었다.

‘민간단체 포럼’ 개막

26일 청년정상회의(Youth Summit)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시작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28일 두 번째 공식행사인 민간단체 포럼의 개최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대회인 만큼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기울여진 세계 각국 민간단체들의 참가열기는 뜨겁다.

28일 현재 8천명 이상이 등록한 민간단체 포럼은 개막 첫날부터 뜨거운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와 인도의 카스트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 문제는 이미 청년 정상회의 때부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여서 민간단체 포럼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정부간 회의에 어떻게 반영될 지 참가자들이나 언론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단체 참가자들은 포럼행사장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귀환의 권리를!” 이라든가 “유엔은 균형을 지켜라!”, “정치가 아닌 인종주의를 논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인도 달리트들도 2백여 명의 대규모 참가단이 곳곳에서 북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외형적 대립 상황 때문인지 행사장 주변엔 경비 요원 2백여 명이 포럼 참가자들에게 몸수색까지 실시하며 행사장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도한 경비 체계로 인해 운영위원회는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포럼이 어떤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지 모르나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포럼에서 들은 여러 목소리에 대해 각국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개막 첫날부터 ‘식민주의, 이주노동자, 난민, 세계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원탁회의, 패널토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 계층, 언어 등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이토록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다음 한 마디로 설명될 것 같다. “나는 평등한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인종차별대회 엔지오포럼은 정 부간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 폐회한다. (남아공 더반 = 심태섭)

“장애인 버스타기는 생존을 위한 것”

‘장애인이동권보장’ 요구, 시내버스 세우고 농성도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싶다”고 절규하던 장애인이동권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29일 시내버스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다.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타시다’라며 종로구 혜화로터리에서 8-1번 버스 네 대에 나눠타고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한 22명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8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30경부터 시내버스 1대를 세운 채 버스안과 외곽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의 관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만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쇠사슬로 몸과 버스 구조물을 묶어 저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경찰 3백여 명을 동원, 오후 5시10분경 농성 참여자 84명을 연행, 종로서 등 시내 5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중이다. 또 70여 명은 이들의 연행에 항의, 오후 6시부터 1시간여 동안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12시부터 혜화로터리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버스타기’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 80여명의 삼엄한 경계속에 이뤄졌다.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버스를 타기에 앞서 “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버스를 타는 것은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일단 세종문화회관까지 갈 것”이라며, “혜화로터리에서 그 곳까지는 가는 버스는 20번과 8-1번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동대문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미신고된 집회”임을 강조하자, 박 공동대표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도 집회신고를 해야하는가?”고 반문하고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려면 항상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게 옳으나?”고 힐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 8월 24일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기 전까지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심보선)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인권운동사랑방을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에 서준식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배경 설명이 없었기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갖은 추측에 싸여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저희 사랑방 일동은 미흡하나마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서준식 씨가 인권활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방의 상임활동가이자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소장으로서 그간 갖은 대외활동에 치여 손뿔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외활동을 중지하고 사랑방 내부 사업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운동가로서 헌신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좀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둘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국가인권위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개소한 국가인권위 기획단은 그 설립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특정 인권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의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극도로 심화된 갈등관계 때문에 서준식 씨가 대외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준식 씨는 한 단체의 대표나 연대조직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끝까지 따질 것을 따지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와 권력에 연연해서 비판한다는 오해를 완전 차단하고 할 말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에 물러나는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직위를 버리는 사임에는 그런 ‘항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백의종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준식 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제기하고 있는가는 이후 행보에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성원들은 서준식 씨의 그런 의지를 존중하는 뜻에서 사임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방의 이후입니다. 서준식 씨는 여전히 우리의 동료로서 함께 하실 것이며, 당분간 류은숙 사무국장이 대표 권한 대행을 합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은 ‘1인 대표제만이 유일한 선택인가? 좀더 민주적이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며, 여러 모델을 분석하여 사랑방에 가장 맞는 조직 형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활동가 전원이 결정과 집행의 책임을 맡는 구조는 계속될 것이며, 어떤 권력과 금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정신과 자생의식 또한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권운동사랑방을 아껴주시는 것은 오로지 ‘올바른 인권운동을 하라, 헌신하라, 당당하라’는 요청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운동사랑방 17명 성원 모두는 자신들의 의무를 매일 되새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8월 29일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드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8월 31일(금)

제 19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노사합의 이전과 이후 사측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노사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은 지난 6월 13일 조종사 노조(위원장 이성재)의 파업철회와 더불어, 노조의 민형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방식과 유사해, 노사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1년 8월 24일자>

관련 형사 고소고발 건을 취한다. 회사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6.13 노사합의서 제1조)

합의서에 따라 대한항공은 고소고발을 취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진 이후, 이성재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은 곧바로 구속돼 벌써 70여일 제 수감중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8일 제2차 공판에서 대한항공측 증인은 구속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은 하지 않는다.」(노사합의서 제2조)

대한항공은 파업종료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종사노조에 시비를 걸었다. 6월 18일 제주 비행훈련원의 교관 17명 중 14명에 대해 전직명령을 내린 것. 훈련원 교육을 내팽개치고 파업에 참가한 것은 교관으로서의 자질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직명령의 이유였다. 7월 20일에는 구속자 4명을 포함하여 간부 7명을 파면하고, 8월 10일에는 '일반 조합원' 1명을 파면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부 관계자는 "파면당한 일반 조합원이 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협상을 이끈 주도적 인물로 교섭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사상의 문제는 최소화한다. 단, 회사는 이 문제로 인하여 향후 노사관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노사합의서 제3조)

현재 대한항공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총 20억원을 가압류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6월 27일 조합비 5억원을 가압류한데 이어, 파면된 7명에 대해 다시 5억원을 가압류했으며, 8월 18일에는 일반 조합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했다. 이에 대해 홍보부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 중 회사에 끼친 손실액이 총 4백억원이며, 불법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20억원은 노조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 황성문 쟁의대책차장은 "6월 13일 노조는 임금까지 동결하면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사측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흐름과 쟁점

1. 광란의 색깔론에 덧칠당한 '만경대 방명록'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 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판의 '광란극'이었다.

2. 정보통신윤리위 검열 강화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음(DAUM), 세이클럽(Say Club)의 동성애자 동호회 등 '불온' 카페가 심심치 않게 폐쇄되거나 급기야 정통윤은 회선사업자에게 특정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통윤은 전농, 전국연합 사이트 등의 회선을 관리, 임대하는 업체에 '구국의 소리' 게시물 삭제 '요구'(8.2)했고, 이에 따라 전농 등 8개단체 사이트가 잠시 폐쇄(8.3)되기도 했다. 정통윤은 또 5백여 개 사회단체의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진보넷에도 '게시물 삭제 요구'라는 형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통윤을 인터넷 상의 '검열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정통윤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던 '소리바다'가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8.12)됨에 따라 정보공유와 저작권을 둘러싼 싸움도 가열될 조짐이다.

3. 인권위 설립 작업 가시화... '밀실 구태' 유감!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 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논의가 인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4. 험난한 과거청산 ... 진상규명·피해구제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중길 교수가 '간첩자백'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9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현직검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청에 거들 불응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23).

5. 아메리카의 후안무치, 그 끝이 없다

주한미군은 "과거 여러 차례 오염토양을 제거"한 사실을 시인(8.10)하면서도, "녹사평역 오염기름은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고 발뺌으로 일관(8.16).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언(8.23)을 하기에 이른다. 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논평

-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8.4)
-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8.1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8.18)
- '방명록 내심' 처벌대상이 아니다(8.25)

인권이야기

- 60억 개의 양심들 (8.7/신운동목)
-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8.17/정옥식)
-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8.21/장여경)
-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8.28/김혜란)

기획 - 한국 감옥의 현실

- ⑤ 식사와 구매 -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나나?" (8.3)
- ⑥ 민영교도소 -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8.10)
- 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 '국민의 감시' 밑으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8.24)

연재-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

- (1)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8.11/김철호)
- (2)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8.18/김철호)

연재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 ①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인류의 행진 (8.30)